



토론회

괴담에 흔들리고, 거짓에 관대한 사회,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

| 장소 | 한글회관 3층

| 주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순 서

■ 사 회

-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제

- 이 동 욱 (기자/‘연속변침’ 저자)

■ 토 론

- 황 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 남 정 욱 (송실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 황 성 욱 (변호사)
- 박 인 환 (건국대 법학과)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발제문

유언비어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7

- 이 동 옥 (기자/‘연속변침’ 저자)

■ 토론문

자정기능을 잃은 언론.....7

- 황 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유언비어를 선동하는 문화계.....15

- 남 정 옥 (송실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거짓유포에 관대한 사법부.....21

- 황 성 옥 (변호사)

미성숙한 시민의식.....33

- 박 인 환 (건국대 법학과)



'분노의 불꽃' - 세월호를 통해 들여다 본 유언비어 세상

이 동 옥

기자/연속변침 저자

들어가는 말

지식인의 불량생산품 - 거짓말의 역사화

건국 70년에 다다른 대한민국은 세계 일류급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600배나 성장했다는 실증적 자료와 물질의 풍요를 구가하는 오늘의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지식성장은 세계 몇 위나 기록하고 있을까? 노동계급의 생산성은 재화의 수익성으로 가름되지만 지식계급의 생산성은 기록물의 객관성과 공정성으로 평가된다. 문맹률 80%에 육박했던 건국 당시 지식계급들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오늘날과 어느 정도의 격차를 만들고 있는 것일까?

이 의문에 답하려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1997년 유네스코에 '조선왕조실록'이 세계 기록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실록'은 조선왕조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기록 유산이어서 지정된 것이 아니다. 일본, 중국, 월남도 자기 나름의 실록이 있지만 유독 '조선왕조실록'만이 유네스코에 세계 기록문화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25대 472년에 걸친 기록의 방대함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는 물론 민간의 사사로운 사건들조차 정확하게 기술해 놓아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다.

친히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짐으로 인하여 말에서 떨어졌으나 상하지는 않았다. 좌우를 둘러보면 말하기를 “史官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태종 7권. 4권(1404 갑신) 2월8일 기묘 4번째 기사)

왕이 “적지 말라”고 하면 사관은 “적지 말라고 하셨다”고 적었다. 이를 보고 왕이 화를 내자 사관은 “적지 말라고 하신 걸 적었더니 적지 말라며 화를 내셨다”고 또 적었다(태백산 고본 3책 4권 3장 8면).

즉, 객관성과 공정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한 수준이기에 세계 기록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왕조실록의 내용을 두고 신뢰할 수 없다며 시비를 걸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기록문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기록 문화도 그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기록되고 있는 것인가.

2016년 이 글을 쓰는 현재, 사실과 다르지만 언론을 통해 현대사로 굳어져간, 주요 항목들을 대강 추려 보자(추가할 항목들이 더 있지만 논의의 신속한 전개를 위해 대강 추린다).

1. 1960년 5월29일자 경향신문 이승만 망명 기사 (1960. 5.29)
2. 5.16 군사 쿠데타 (1993년 이후 ‘혁명’에서 ‘쿠데타’로 굳어짐)
3. 1987년 제 13대 大選 컴퓨터 부정선거 기사 (1987. 12.)
4. 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 가짜설(1987.12/ 2012에 반복)
5. 트럭 기사의 김대중 암살설 (1987.5 ~ 현재)
6.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8년 초~ 현재)
7. 북한 특수군 광주사태 개입설 (2002년~현재)
8. 제주 4.3 사건 (1993년 이후 사태에서 사건으로, 내용도 달라짐)
9. 여수 . 순천 사건 (1993년 이후 사태에서 사건으로, 내용도 달라짐)
10. 장준하 암살설 (...)
북한 땅굴 서울 통과설
11. 반공 소년 이승복 기사 조작설 (1992~2002)
12. 대선후보(이회창) 아들 병역 폭로 사기 사건 (김대업 사건)
13. 노무현 대통령 탄핵 부당설 보도
14. 2008년 광우병 사태와 PD수첩의 선동 보도
15. 천안함 폭침 사건 유언비어 기사
16. NLL 상남 대화록 파문
17. 국정원 댓글 사건 파문

18. 유언비어 종합세트 세월호 사건
19. 메르스 사태
20. 박주신 병역 판정 의혹 시비 사건

이것이 대한민국 지식계급들이 70년간 생산해 놓은 ‘역사적 기록물’들이다. 역사의식이 명료한 지식인이라면 위에 열거된 내용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조립할 경우 1류 국가는커녕 3류 국가도 부족하다는 판단을 할지도 모른다. 해방과 건국, 전쟁과 혁명을 거치면서 70년 동안 하급 노동자부터 자본가에 이르기까지 경제 일선에서 노력한 노동계급들이 세계가 경탄해마지않는 성장의 기적을 기록해 가는 동안 한국의 지식계급들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중인 것이다. 단언하자면 노동계급들이 위대한 역사적 성취를 하는 동안 지식계급들은 부끄러운 지식 불량품을 양산해 왔다는 이야기다.

노동계급이 생산을 불량하게 했을 경우, 공사라면 부실공사가 되어 건물이나 교량이 무너지고 그 피해가 확연하게 발생한다. 불량식품을 제조 및 판매했을 경우에도 그로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터진다. 그 때문에 처벌과 단속, 제도의 개혁 같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종래에는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시스템의 진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의 지식계급에서는 노동계급과 같은 진화의 시스템이 아예 없다. 거짓을 기록해 두고 그대로 방치해 놓아 시간이 흐르면서 ‘거짓말의 歷史化’가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거짓말의 역사화’는 그 유형도 다양하다.

예를 들면 ▲언론이 유언비어를 사실처럼 포장해 유포시키다 발각되어도 수정하지 않는 경우(이승만 망명설, 컴퓨터 부정선거설...등등), ▲다수가 거짓을 외치면 소수의 진실이 법정에서 조차 기각되곤 하는 경우(5.16 쿠데타 설, 광주 민주화 항쟁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부당 설), ▲좌·우 진영에서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생산해 유포시키는 경우(김현희 가짜설, 반공소년 이승복 기사 조작설,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설, 북한 땅굴 서울 통과 설...), ▲공공 기관을 통해 버젓이 거짓을 유포하는 경우(트럭 기사 김대중 선생 암살 미수설, 제주 4.3 평화 기념관, 광주 5.18기념관...) ▲통치권자에 의해 거짓말의 역사화가 자행된 경우,(4.3, 5.18...)▲검찰과 사법부의 거짓 옹호 (박주신 병역 의혹설...) 등이다.

위 여섯가지 분류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세월호 사건이다. 짚어 보자.

- ▲ 언론이 유언비어를 사실처럼 포장해 유포시키다 발각되어도 수정하지 않는 경우
- ▲ 다수가 거짓을 외치면 소수의 진실이 법정에서 조차 기각되곤 하는 경우
- ▲ 좌·우 진영에서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생산해 유포시키는 경우
- ▲ 공공 기관을 통해 버젓이 거짓을 유포하는 경우
- ▲ 통치권자에 의해 거짓말의 역사화가 자행된 경우
- ▲ 검찰과 사법부의 거짓 옹호

세월호 사건은 유언비어가 언론과 방송뿐 아니라 권력과 지식인의 입을 통해 공중에 유포되는 궁극의 종합편일 것이다. 주요 대목별 취재 기록을 열어가 보자.

몸 말

세월호 속의 유언비어들

[세월호 사고 개관]

2014년 4월16일 오전 08시 48분부터 기울어져 전복되기 시작한 여객선 세월호는 오전 10시 31분경 수온 11도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전복됐다. 최대 유속 5.5노트(초속 2.8m)로 국내에서 두 번째 급물살로 유명한 맹골수도 부근이었다. 여객선 세월호는 철제 격실로 만들어진 일반 어선이나 군함과 달리 석고보드 같은 합판으로 내부 공간을 꾸며놓아 내부 객실이 수밀(水密)되지 않는 여객선이였다. 더구나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선체가 전복되면서 물이 서서히 유입된 세월호 내부에는 에어포켓 같은 생존 가능한 공간은 없다고 봐야 했다. 08시 52분 전복이 시작된 이후 10시31분 선체가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시간별 상황>

▶선체가 30도로 기울어 진 시각은 08시 52분.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우려 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2분당 1회 안내방송 최초 시각 08시 52분 32초.

▶사고 신고가 해양경찰청에 접수된 시각은 08시 58분.

- ▶해경 P123정에 출동명령이 하달된 시각은 09시 04분 50초.
- ▶선체가 53도로 기울어지며 화물칸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시각은 09시 30분.
- [움직이지 말라는 안내방송 계속됨]
- ▶“선실이 더 안전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안내방송 最終 확인 시각 09시 36분.
- ▶헬기 B511, P정(09시 30분), B513(09시 32분), B512(09시 45분) 순서로 도착.
- ▶P정의 고속단정이 세월호 선체에 매달린 승객을 처음 구조한 시각은 09시 39분 48초.
- ▶선체가 61.2도를 넘어서는 가운데 해경이 조타실로 줄을 걸어 올라간 시각 09시 46분.
- ▶선체가 62도가 될 때 객실 침수, 잠수 탈출 시작 시각은 09시 47분 경.
- ▶기울어진 조타실로 올라간 해경 대원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철수한 시각 09시 48분.
- ▶세월호 승무원들이 P정에 구조된 시각 09시 49분.
- ▶어업지도선 201호 현장 도착 시각 10시 04분 15초.
- ▶세월호 선체 유리창 파손후 승객 6명 P정에 구조된 시각 10시 07분 35초.
- ▶선체가 77.9도로 급속 전복중인 시각 10시 10분.
- ▶소형 민간어선 피시헌터호와 태선호가 구조 시작 시각 10시 13분 05초.
- ▶최초의 탈출 지시가 승무원의 육성으로 전해진 시각 10시 15분.
- ▶선체가 90도로 전복중인 시각 10시 15분 15초.
- ▶어선과 구조선들이 침몰중인 선체로부터 일제히 후퇴했던 시각 10시 15분 24초.
- ▶선체가 100도로 전복중인 시각 10시 16분 07초.
- ▶선체가 108.1도로 전복중인 시각 10시 17분.
- ▶선체가 110도로 전복중인 시각 10시 17분 10초.
- ▶어업지도선 201호가 재접근해 떠내려가는 승객 구조한 시각 10시 17분50초.
- ▶갑판이 수면 아래로 잠긴 시각 10시 18분 09초.
- ▶201호, 207호가 구조중일 때 수면 아래 유리창속 승객들 확인 시각 10시18분56초.
- ▶전복된 세월호 5층이 물에 잠긴 시각 10시 19분00초.
- ▶전복된 세월호 4층이 물에 잠긴 시각 10시 19분 30분.
- ▶전복된 세월호 3층이 물에 잠긴 시각 10시 20분 11초.

▶완전 전복 시각 10시 22분 30초.

▶선체 80% 침수된 시각 10시 22분 48초.

▶세월호 선체가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 사실상 구조 종료된 시각 10시 31분.

※ 09시30분~10시31분까지 61분간에 걸쳐 P123정, 헬기 3대, 어업지도선 2척, 민간 어선 2척이 선체 밖에 매달린 승객 172명 구조.

이 사건은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과 교사와 승무원을 포함한 일반 승객 151명 등 총 476명이 타고 있었지만 전복되던 1시간 40여 분 동안 선체 밖으로 나온 172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객 304명은 모두 익사해 버린 대형 해상 교통사고였다.

대한민국 해상 면적은 육지의 4배를 조금 넘는다. 이 해역의 치안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해양경찰이 보유한 선박은 303척. 이들 중 절반을 해역에 분포시켜놓아도 선박과 선박 사이의 평균 거리는 50km가 넘어 긴급 출동시 2시간 내에 도착하기에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순찰정의 최대 시속 약 20km). 그런데 사건 당일 P123정은 우연히 세월호와 같은 방향으로 순찰중이었다. 이로 인해 신고접수 후 약 30여 분만에 전복중인 세월호에 접근해 선체 밖으로 탈출하던 승객 172명 전원이 구조됐다. (P정이 45%인 79명을 구조했으며 나머지 승객들은 헬기와 어선들이 구조).

수밀객실이나 에어포켓이 있던 없던 물 속으로 가라앉은 선박에 대한 구조활동은 ‘해양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 협약)’에 따르면 ‘수색 및 구조활동은 실행 가능한한, 생존자 구조에 대한 모든 합리적 희망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월호의 경우 이런 ‘합리적 희망’은 4월18일 오전 0시 30분까지만 가능했다. 그때까지 물 밖으로 내 밀었던 선저의 구상선수(球狀船首)가 물속에 잠기면서 선체 전체가 45m 해저 바닥으로 가라 앉아버렸다.

비정상적인 手順

재난사고에서 구조활동이 종료되면 ‘복구 단계’로 접어든다. 해난 사고시 구조활동이 종료되면 해당 지자체가 복구의 주체로 활동을 시작한다. 세월호 해상 사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더라면 4월18일 오전부터 전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행자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 철수하고 그 자리에 전라남도 도지사가 지휘하는 재난안전복구본부가 설치되었을 것이다. 시신인양과 침몰선 처리 문제 및 유가족 보상 문제를 재난안전복구본부가 선사측과 협상하며 진행시켰을 것이다. 선사측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계열사의 모든 자산을 순차적으

로 유족 보상금으로 제시하는 수순을 밟았을 것이다.

세월호 재난 사고가 순리대로 처리되었더라면 우리 사회가 이 재난을 통해 습득한 교훈을 일상속에 내재시켜 후세에까지 전수하는 과정을 밟았을 것이다. 선박 승선자의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은 국민 교양으로 자리 잡고, 장거리 여행시 교사들의 학생 구조 훈련도 병행되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보다 합리적인 해양행정이 정비되고, 보다 안전한 해양 교통망이 발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해양우호세력의 성장을 도모하여 인양업체들의 선진화와 민간 잠수사들의 조직적 구조활동을 위한 교육훈련 및 각종 지원 체계등이 수립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세월호 사건이 대한민국을 동북아 최대의 해양국가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이 사고로 사망한 안타까운 피해자들로인해 대한민국이 선진 해양국가로 성장하면서 국민들은 세월호의 사고 피해자들을 국민적 희생자로 기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만이 ‘안타까운 피해자’에서 ‘고귀한 희생자’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고, 그 일은 복구 단계를 담당하는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정 반대로 흘러갔다. 세월호 사고는 구조 활동의 종료선언을 못한 채 장장 210일 동안 잠수 수색을 계속해 이 방면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당연히 복구 작업도 이루어 지지 못했다. 광화문의 세월호 유족들 플래카드에는 “지금도 세월호에는 사람이 있습니다”란 문구가 내걸려 있다. 실종자 9명의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 걸린 문구이다. 생과 死의 현실을 구별 못하는 집단을 향해 그 누구도 차분한 설득을 못한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는 발생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변모한 채 떠도는 중이다.

재난의 생존주기

재난사고는 예방 단계와 대비 단계를 거쳐 사고 발생시 현장에서의 구조를 통해 대응 단계를 밟는다. 대응 단계는 구조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복구의 단계로 이전된다. 즉, 재난사고는 <예방-대비-대응-복구>라는 생존주기를 갖고 있다. 세월호의 경우, 예방-대비--대응 단계에서 복구로 이행되지 못한 채 또 다른 재난으로 변져나갔다. 인간적 실수로 빚어진 <인적 재난>이 그 자체로 복구되지 못한 채 사회전반에 걸친 분열과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재난>으로 변질된 것이다.

무엇이 교통사고 같은 <인적 재난>을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시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연구과 답변이 사고 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 사회는 과연 어느 시대를 향해하는 중일까. 지금부터 사고 당시 <사회적 재

난>으로 번져가게 했던 분노의 불꽃들을 추적해 보자.

<참고> 본문에 실린 세월호 당시 상황들은 필자가 직접 취재해 출간한 <연속변침>에서 발췌한 내용들로 팩트 수정 없이 발췌 개제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시간과 지면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저널리즘에서는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두괄식 문장과 압축 편집을 선호한다. 그러나 유연비어의 진원지를 탐색해 들어가려면 이런 방식은 또 다른 오차를 빚어내고 새로운 유연비어를 제공할 수 있다. 번거롭지만 디테일한 묘사와 정밀한 설명만이 전달의 오차를 줄일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오차없이 설명하기 위해 다소 긴 글들이 실리게 됨을 미리 밝힌다. 정확한 기록을 위한 디테일 작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틈을 비집고 유연비어의 씨앗들이 들어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격언은 유연비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노의 불꽃 1. 방송사 전부가 유연비어 유포자

가족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들의 심리 상태는 ‘현실 부정의 단계’를 거쳐 ‘분노의 단계’로 접어들고 그 후 ‘타협’과 ‘절망’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용’ 단계로 접어들며 유족들은 서서히 현실에 적응해 간다. 따라서 비극을 겪게 된 이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부정’과 ‘분노’의 단계를 최대한 짧게 줄이고 빨리 ‘타협’과 ‘수용’의 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웃과 사회’가 지원해 주었어야 했다. ‘이웃과 사회’에는 언론과 방송을 위시한 지식인들,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이 앞장서는 것이 정상 사회이다. 이것이 재난 발생 후 복구 단계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대응의 목표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편을 위시한 방송과 언론의 오보와 정치평론가를 포함한 자칭 전문가들에 의해 조성된 유연비어들로 인해 ‘부정’과 ‘분노’의 단계가 단축되기는커녕 확대, 증폭되었다.

흥분한 군중의 심리상태는 폭발하기 쉬운 인화물질과 닮아 있다. 유연비어는 이들에게 분노의 폭발을 촉발하는 불꽃처럼 작동한다. 충격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분노의 불꽃이 최초로 옮겨 붙은 때는 오전 11시경으로, ‘전원 구조’라는 모든 방송사들의 오보에서 비롯되었다. 그날 아침, 학생 325명이 탄 배가 침몰중이란 소식을 접한 단원고측은 09시30분에 사고 사실을 경기도 교육청에 알린 뒤, 학부모들에게는 20분 뒤인 09시50분, 단체문자를 돌렸다. 믿을 수 없고, 믿기 싫은, 상상한 적도 없고, 상상조차 끔찍한 소식을 TV 방송과 학교 측의 문자 고지로 접한 학부모들은 일상의 모든 일들을 뒤로 미룬 채 학교의 4층 강

당으로 모여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부모들의 수가 늘어나 30분도 안 되어 500여 명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핸드폰으로 자녀와의 통화를 시도하며 불안감을 놓지 못했다. 학교 측은 이들에게 ‘구조 중’이며 ‘모두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말만 해줄 뿐이었다.

학교 측은 의자만 가득 찬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TV의 뉴스 속보를 계속해서 시청하도록 해 두었는데 오전 10시50분쯤 대형 스크린에 배가 뒤집힌 모습이 크게 채워졌다. 학부모 중 몇 사람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막으로 ‘전원구조’ 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시가 지나고 있을 때였다.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하는 가족들을 여러 번 속게 만든 방송사들의 오보 경쟁은 이때부터 시작했다. 거기에는 어느 방송사든 예외가 없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가 전부 가담했다. 시간별로 나열해 본다.

-MBN (11:01:07) “학생 모두 구조” 자막.

-MBC (11:01:26) “안산 단원고 학생들 전원 구조” 자막 + 멘트.

-SBS (11:02:12) “안산 단원고 측 학생들 전원 구조” 등.

-채널에이 (11:03:17) “안산 단원고 조난학생들 전원 구조” 자막 + 멘트.

-YTN (11:03:58) “학생들은 전원이 구조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멘트 등.

-뉴스와이 (11:06:03)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학생들이 전원 다 구조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멘트 등.

-TV조선 (11:06:27) “사고 선박 학생, 교사 338명 전원 구조” 자막 + 멘트.

-JTBC (11:07:22) “안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 구조” 자막 + 멘트.

-KBS (11:26:10) “경기 교육청 대책반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자막 + 멘트

방송이 나가는 사이, 11시08분에 단원고 당국이 ‘전원 구조’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날렸다. 강당에 나와 있던 학부모들도 ‘전원 구조’ 문자 메시지를 받아 여러 번 읽어 보면서 다시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스크린에 비치는 방송들도 이런 사실을 계속 입증해 주고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했다.

약 2분 뒤인 11시10분, 학교 당국자가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학생들이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해 ‘전원 구조’를 확정지었다. 학부모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학교 당국을 용서해 준다는 의미였다. 이 정도 방송과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면 누군들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강당은 웃음과 희망으로 채워지는 듯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리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 아이들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구조가 됐다니 살아있는 것은 확실한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걸 보니 어딘가 다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 것이다. 이때 학부모들은 구조된 학생과 통화를 하던 학부모로부터 전화기를 돌려받아 “우리 애 못 봤니?” 하며 자녀들의 안부를 확인하려 애를 태웠다.

11시15분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브리핑을 통해 “공식 구조인원이 161명”이라고 발표했다. 잠시 후 안산 단원고등학교 4층 강당에서 학교 당국자가 연단 위로 올라갔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라앉은 음성으로 “해경이 아직 구조중이라고 통보해 왔다”며 ‘전원 구조’를 반복했다.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다시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였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울음 섞인 고성과 항의성 욕설을 내뿜었다. 최초의 오보로 인해 유가족이 될지도 모를 학부모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불과 두어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생생한 음성으로 통화까지 한 아이들이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침몰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는데 1시간쯤 지나서는 모든 방송들이 ‘전원 구조했다’고 하더니 30분 뒤에는 정부 당국자와 학교 당국자가 ‘161명만 구조됐고 나머지는 현재 구조 중’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이다. 실은 172명의 구조로 사실상 수상 구조활동은 종료되었고 그 중 단원고 학생은 절반도 안되는 75명이었지만 학부모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단원고 학부모들은 말기 암환자들처럼 단 한 번의 사망 통지로 심리적 고통의 강을 건너야 했던 것이 아니었다. 당장 사고 당일 오전부터 <침몰-전원 구조-일부만 구조> 식으로 사망통지의 충격이 반복되는 중이었다. 게다가 들려오는 소식은 배가 이미 침몰했다는 것이다. 멀쩡한 사람들을 절망과 희망 사이, 지옥과 천국 사이를 오락가락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계속 구조중이라는 소식이 겹쳐서 ‘포기’하지 못하게 학부모들의 애간장을 계속 녹여갔다. 방송도 가세해서 “아무쪼록 희망을 잃지 마시고...”를 연발했다. 이 멘트는 1주일이 지나도록 계속된다. 첫날 오전에 학부모들의 집단적 분노가 방송사의 오보

로 인해 임계점을 향하고 있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오보를 낸 방송사들이 분노의 재판에 서게 될 것이 확실했다. 방송사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유족들의 분노를 받아 낼 희생양을 찾아 나서야만 했다.

분노의 불꽃 2 - 당국의 부실한 공보대응 : 일곱 번 반복한 승선자수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은 여객선과 誘導船(유도선)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과’와 인명을 구조하는 ‘수색 구조과’가 개입한다. 해양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익사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형사과’가 동원된다. 침몰사고의 익사체가 발생하는 사건에서 ‘형사과’는 사고발생 경위와 사고 원인을 밝히고 인양된 시신의 정확한 신원정보를 검증하는 등 수사 전반에 관하여 일선 부서를 지휘한다. 항공사고와 달리 해양사고에서는 승선자수가 즉각 확정 발표되지 않는다. 盜港처럼 몰래 승선하거나 표만 끊어놓고 승선하지 않는 경우, 항해 도중 다른 배나 섬에 하선하며 총 승선인원에 기재 안 된 경우 등 오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 사고 발생시 총 승선자수는 사고 수습후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검증을 거친 뒤 확정 발표한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 당일 언론과 방송은 유독 승선자 수와 구조자 수에 매달리게 된다. 바로 한 시간쯤 전에 빚어진 오보소동에서 면피 대상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옆으로 기울어진 뒤 102분 만에 침몰해 버린 이번 사고에서 海警 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조된 생존자들은 그날 오후부터 진도 팽목항으로 이동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큰 불편이 없는 생존자들은 진도 실내체육관으로 옮겨갔다. 사고 현장은 바다였으므로 정확한 인원 점검은 육지의 팽목항, 체육관, 병원 등에서 가능했다. 팽목항에 막 도착한 생존자들을 포함해 인근 병원과 진도체육관으로 옮겨진 생존자들을 합산한 최초 세월호 생존자는 179명으로 집계되고 있었다.

그날 오전 09시04분 안전행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주관하며 나섰다. 혼란을 겪던 언론들은 중대본이 출범하자 곧바로 중대본에 승선자와 실종자 및 생존자의 정확한 숫자를 요구했다. 정확하지 않다면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고 솔직하게 대응했어야 했는데 중대본은 정직할 만큼 용감하지 못했다. 급한 대로 검증 없이 승선자와 실종자 및 생존자의 숫자를 끌어 모아 발표했다. 신기하게도 이날 10시 정각에 처음 발표한 승선자 수는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검증된 수와 똑같은 476명이었다. 학생수도 325명으로 정확했다. 사고 후 수일동안 단원고 당국 조차 학생수를 324명으로 상황판에 기재해 놓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첫 발표의 정확성은 우연의 일치였을 것이다.

만약, 이 숫자에 별다른 의문 없이 사후 검증을 해 갔더라면 별 탈이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한번도 '전원구조'라고 발표한 적이 없었던 중대본은 오전 11시 15분, '공식 구조인원'을 '161명'이라고 발표해 방송사의 단체 오보행진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 이 발표가 방송과 언론들에게 '희생양의 선언'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11시 15분 경 구조된 사람들은 서거차도에도 있었고 일부는 팽목항으로 이동중이기도 했으며 또 그 중 일부는 최후에 헬기로 구조되어 막 바로 팽목항으로 이동하고 있어 누구도 정확한 구조인원을 산정할 수 없었다. 사고현장의 복잡성을 감안해 정확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솔직하게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중대본은 그런 용기가 없었다.

훗날 '전원 구조'의 근원지를 조사했던 한 관계자는 진원지를 진도 군청 소속의 어느 공무원으로 지목했었다. 그 공무원이 지나가는 말처럼 내뱉은 내용을 속보경쟁에 몰입했던 방송과 언론들이 확인없이 앞 다투어 보도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것이 중대본의 161명 구조발표로 뒤집어지자 '못 믿겠다'며 중대본에 분풀이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승선자수의 정확성을 요구한 것이다.

중대본은 이런 상황에서 약삭빨라야 했었다. 현재 총 승선자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못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피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당시 중대본은 방송과 언론의 검증게임에 발을 들여다 놓고 만다. 그러면서 첫날 열두 시간 동안 일곱 차례나 승선자와 생존자수를 번복하고 또 번복해 갔다.

- ▶오전 10시00분 중대본, 1차 공식브리핑 '476명 승선,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
- ▶오전 11시15분 중대본, 2차 공식 브리핑 '공식구조인원 161명'
- ▶낮 12시11분 중대본, 3차 공식 브리핑 '179명 구조...선사 여직원 1명 사망' (1차 번복)
- ▶낮 01시30분 중대본, '구조 368명, 사망 2명 확인'(2차 번복)
- ▶오후 02시30분 중대본, '구조 180명, 사망 2명, 실종 290여명'(3차 번복)
- ▶오후 03시00분 중대본, 승선자 477명 중 구조 180여명, 사망 2명, 실종 290여명(4차 번복)
- ▶오후 05시00분 중대본, 5차 브리핑 '탑승 459명, 구조 164명, 사망 2명, 실종 293명'(5차 번복)
- ▶저녁 08시00분 중대본, '탑승 459명 구조 164명, 실종 290명, 사망 5명'(6차 번복)
- ▶저녁 08시30분 중대본, 승선자 477→459→462→475명으로 변경 (7차 번복)

안행부의 중대본은 스스로 여론의 분노를 자초했다는 판단이 서자 이날 오후 정확한 승선자 수 파악 임무를 해양경찰청에게 떠밀어 버렸다. 그러자 방송과 언론은 중대본이 곧 海警이라 간주하고, “정확한 승선자 수도 모르는 이런 海警이 무슨 구조를 하겠냐”고 질타를 가하는 중이었다. 언론은 海警을 “전원 구조에 실패했다”고 몰아세우며 海警을 악마로 만들어 가는 데 골몰했다. 그러면서 ‘중대본’의 실수를 ‘海警’의 무능으로 착각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중대본의 실책이 海警의 실책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언론과 접촉하는 공보실 등 행정부처의 미숙한 대응이 유언비어를 제공하는 경우였다. 그들은 해상사고의 경우 승선자수는 나중에 확인해 줄 수 있다고 그 사정을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속보경쟁에 몰입한 언론과 방송의 기에 눌러 허겁지겁 되는 대로 숫자를 불러댔다. 세월호 사건에서는 초기에 이런 실수가 빚어지면서 정부와 해당 부처 스스로 신뢰를 상실해 버리는 계기가 됐다. 작은 불꽃 하나가 해경이란 조직을 홀랑 태워먹은 사건으로 변해간 경우였다.

<루머의 強度 = 모호성 X 사건의 중요성>이란 공식은 이미 60년대 말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상식이다. 아무리 세인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가 제공되면 헛소문은 힘을 잃는다. 모호성=0 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당국의 신뢰성 상실은 스스로 ‘모호성’을 크게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인적 재난이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공신력있는 공보활동이 중요하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이런 중요성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듯하다. 그리하여 이날 오후부터 海警이 주범으로 몰리기 시작한다.

분노의 불꽃 3. 의도적 왜곡 보도

<“해경 덕분에 살았다”는 말이 사라지다>

사건 첫날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세월호 승선자 총원을 일곱 번 반복했다. 언론과 방송은 이성을 잃고 현장에서 약 50여 분 동안 승객의 36%인 172명을 구조한 海警(해경)을 사고의 주범처럼 몰았다. 구조되지 못한 나머지 승객들이 ‘선실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따르다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생존자들이 “해경 덕분에 살았다”는 증언을 했지만 이런 말들은 방송이나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

지 않았다.

생존자 김태환(가명) 씨 같은 경우 “그날 오후 병원에서 수십여 명의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이 찾아와 구조과정을 이야기하고 배가 넘어지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 사람들(기자들)은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쓰고 싶은 말만 따서 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해경 때문에 살았지 해경이 없었으면 어업지도선과 작은 어선으로 탈출 승객의 절반도 못 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씨의 증언을 보도한 언론과 방송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모두 해경을 주범처럼 몰아가는 데 골몰했다.

‘그 바다’를 아는 사람들은 그 바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팽목항 현장에 출동한 기자들은 해경의 약점 캐기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구조의 주체였던 해경에 대한 칭찬이나 감사의 인사는 단 한 줄도 보도된 적이 없었다. 이것이 세 번째 불꽃이 되어 분노하는 대중들에게 옮겨 붙었다. 사건 당일 오후부터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거짓의 불꽃에 타들어가기 시작해 결국 조직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른다.

분노의 불꽃 4. 공보의 부족이 거짓이 힘을 갖도록 모호성을 키우다

사고 발생 첫날 정오가 지난 시각, 해경의 두 잠수대원들이 하잠줄을 설치하기 위해 잠수하던 중 소용돌이치는 하강조류에 휘말렸다. 그 중 한 명은 선체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겨우 빠져나왔다. 두 대원은 보트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구조된다. 비로소 사고 해역의 위험을 체감한 해경도 ‘그 바다’를 조금은 알게 됐다. 천안함 침몰 수역은 조류가 약 3노트였다. 美 해군도 포기한 곳이었다. 세월호 침몰 지역은 천안함 해역보다 두 배 가까이 빠른 최대 5.6노트를 기록한다. 게다가 큰 선체가 물 속에 들어앉으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 이곳의 조류를 측정해 본 해경은 유속이 최대 11노트가 나온 때도 있다고 했다. 초속 5.6m, 시속으로는 20.37km로 물살이 휩쓸고 지난다는 의미다. 인류 역사상 저토록 강한 조류가 쓸려다니는 바다 속을 사람들이 잠수해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이런 사실을 방송과 언론은 알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경의 공보 담당자가 재빨리 사고 해역의 해양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전파시켰어야 했다. 취재진들의 정보 수준을 높여놓아야 오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 앞에 해경의 공보 담당자들은 밀려들어오는 오보의 수정 요구에 급급했다.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 해경 같은 현장 대응 조직은 최소한의 인

원을 공보팀에 배치한다. 평소 지역 언론과의 대면이 전부였던 이들이 갑자기 전국의 모든 언론과 방송에 맞서기에는 족달불급이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언론과 방송들의 오보세례는 첫날부터 시작되더니 날이갈수록 하루 수십건씩 늘어났다. 정정보도 요청건수가 수 백 건으로 늘어날 무렵엔 해경이대통령에 의해 해체된다. 누구도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됐다.

無知가 만들어낸 모호성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짓 정보 같은 유언비어들이 중국에는 국가 기관을 해체시키고 또 다른 사회적 재난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분노의 불꽃 5. 데마고그 신상철의 첫작품은 에어포켓

16시23분

해가 저물어 갈 무렵, 단원고 학부모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줄지어 진도 대교를 건너고 있었다. 이들 대다수는 이날 아침에 사고 소식을 듣고 학교로 달려왔다가 ‘전원구조’소식에 안도했으나 15분뒤 161명만 구조됐다는 소식으로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가능한 사고 현장과 가까이 접근하려는 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이 이들을 팽목항으로 이끌었다. 진도군청 공무원들은 진도군 실내체육관에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긴급 동원되었다. 세월호 재난본부가 설치되는 것이다.

버스 안은 대체로 조용했다. 대부분이 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부모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식의 生死(생사)였다. 다른 어떤 것도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없었다. 사고 소식을 접한 후 아이에게 백 번도 넘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휴대폰만 손에 꼭 쥐 채 가끔씩 열어보곤 했다. 그러다가 걸려온 전화벨 소리에 실낱같은 희망으로 걸려온 번호를 보지만 사고 소식을 접한 친척들의 전화여서 맥은 맥대로 다 풀려 절반쯤 탈진한 상태가 됐다. 그러는 동안 끊임없는 상상을 반복했다. “만약에 죽었다면, 만약에 살았다면...” 모든 상상들은 이내 눈물로 귀결되고 있었다. ‘끔찍하다’는 표현이 이토록 절절하게 다가온 적도 없었을 것이다. 이들을 태운 버스가 비교적 차분할 수 있었던 다른 이유로는 구조된 학생의 부모들이 함께 타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생존 학생의 부모들로서는 더욱 말조심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들의 적극적인 침묵이 버스 내부를 더욱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슬픈 어른들을 태운 대형버스가 줄지어 진도군 실내체육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2011년 5월에 개관한 진도군 실내체육관은 뒤편의 공설운동장과 함께 진도군민 최대의 체육시설이다. 진도읍 동의리 저수지 위 산등성이를 밀고 지어진 진도군 실내 체육관은 1500 객석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지어졌지만 개관 이래 객석과 농구 코트가 있는 바닥까지 사람들로 가득찬 적이나 24시간 연속 조명을 켜 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던 이곳에 4월16일 오후부터 진도군청이 세월호 침몰사고 재난본부를 설치한다. 이로써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임시 대기 장소로 변모하는 중이었다.

진도군청 직원들은 농구 코트가 있는 바닥 전체에 비닐 매트를 깔았다. 실종자 가족들의 임시 대기 장소로는 코트의 한 가운데에서 우측 편으로 매트리스와 대형 모포를 가지런히 펼쳐 놓아 구분해 두었다. 펼쳐진 모포 한 장당 한 가구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유도했다. 약 200여 곳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나중에는 체육관 코트 전체가 실종자 가족들의 공간이 된다. 코트 좌측에는 대책본부와 자원 봉사자들의 테이블이 위치했고 핸드폰 충전을 위한 장소 등이 마련됐지만 개별적으로 나눠줄 침구류 등은 아직 한쪽에 그대로 쌓아 두고 있었다. 당장 오늘 밤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정면의 무대 왼편에는 ‘응급환자 이동진료소’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이동병원을 마련했다. 체육관 입구에서 내부로 향하는 로비에도 경찰, 119소방, 보건소 등 구조직 공무원들의 임시 사무소가 설치됐다. 그들 옆으로 경찰 어머니회 자원봉사단과 여러 종교단체에서 나온 자원봉사단들의 책상이 줄지어 마련됐고 이들로부터 기부된 컵라면과 간식, 생수 등 각종 구호물품들이 적재되고 있었다. 웬만한 마트의 물류창고를 방불케 했다.

밖으로 나가면 버스가 들어와 사람들이 내리게 되는 입구에 생존자 명단이 비치된 게시판을 세워 두었다. 가로 길이가 약 2m 되는 화이트보드를 세운 뒤 구조자의 이름과 소속이 적힌 4절 크기의 명단을 여러 장 붙여 두었다. 현지에 미리 내려왔던 취재기자들은 낮 시간 동안 팽목항에서 취재를 하다 그들 중 일부가 오후 5시 무렵부터 진도군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했다. 취재 영역이 두 곳으로 나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준비가 거의 끝날 무렵 학부모들을 태운 관광버스들이 500여m 아래 동의 삼거리 쪽에서 체육관으로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다. 경비와 안내를 맡아 현장에 나온 의경들은 잔뜩 긴장한 채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다.

오후 5시. 학부모들을 태운 버스가 진도 실내체육관 앞에서 멈췄다. 침통한 표정으로 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지 구분 없이 모두가 빨갛게 충혈되어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구조자 명단이 걸린 게시판을 보자 서로 달려가 자식의 이름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혹시나’ 하는 심정이 살면서 그토록 간절했던 적이 있었던가. 하지만 여지없는 절망감으로 빠져들었다. 곧이어 통곡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이고 내 새끼, 어디 있니”

이런 곡성은 삽시간에 전염되듯 퍼져 나갔다. 대다수가 자녀의 이름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터져 나오는 울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며 지켜선 경찰관을 붙들고 “우리 아이 좀 찾아 주세요”라고 하소연하는 부모도 있었다. 240여 명의 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울음소리가 달랐고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몸짓이 달랐을 뿐이었다. 그 사이에 대기 중이던 취재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연신 눌러졌다. 집단적인 슬픔은 금방 주변으로 전염되어 기자나 경찰이나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슬픔은 나누면 작아진다고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이었다.

약 10여 분 뒤 이들은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를 받아 실내 체육관 안으로 들어선다. 이때부터 이들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기나긴 정신적 고통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러는 동안 생존 학생의 부모들은 자녀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체육관 안쪽에 남아있던 자녀와 조우하게 되지만 이들의 감격적인 만남은 취재진들의 관심을 벗어나 있어 조용히 뒤로 물러나게 됐다.

이날 오전, ‘전원 구조’라는 결정적 誤報(오보)를 양산했던 언론과 방송들은 ‘생존자 여부’와 ‘구조 가능성’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었다. 재난보도에 관한 취재 윤리나 보도 기준 등을 제대로 교육받은 바 없는 이들은 무차별적인 선정 보도 경쟁으로 또 다른 재난을 빚어내기 시작한다.

지식인의 탐욕은 명분을 둘러쓰고 있어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재난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한다는 명분을 둘러쓰고 ‘생존자 찾기’ 게임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실을 검증하는 고된 과정을 생략한 채 소설같은 제목과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거짓 희망’이 대중에게 유포됐다. 거짓 희망의 거품이 꺼지면 가족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클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이미 희생양으로 전락해가는 해경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무렵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언론과 방송에게 기막힌 먹잇감이 던져졌다.

차분하게 복구단계로 들어서야 했지만 이미 경쟁을 시작한 언론과 방송들은 보다 흥미 있는 게임을 노렸다. 유가족들이 진도에 도착하기 얼마 전인 오후 4시24분. 인터넷 신문 <노컷뉴스>는 ‘천안함이 폭침이 아니라 좌초’라고 주장하던 신상철씨의 ‘에어포켓’ 주장을 기사화하고 있었다.

신 씨는 “배가 완전히 뒤집혀 있는 상태인 만큼 에어포켓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며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는 “공기주머니는 배가 완전히 물 밑으로 가라앉더라도 인위적으로 빠지 않는다면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며 빨리 잠수부들을 투입해 격실마다 수색하면 생존자들을 최대한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필두로 그날 오후 모든 종편들은 ‘에어포켓’과 생존자의 구조 가능성을 주제로 올렸다. 그러면서 잠수 구조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면에 또다른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을 소설처럼 떠벌리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구조지휘를 하는 海警은 이 무렵부터 완벽한 악당처럼 취급되기 시작한다. 이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비합리적인 희망’을 품게 되고 ‘황당한 음모론’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자식의 生死를 몰라 경황이 없는 실종자 가족들은 언론과 방송이 조성한 이러한 분위기에 노출되면서 선동에 이용당하는 피해자가 되어야 했다.

그럴듯한 소문을 만들어내 대중을 조작하는 사람을 데마고그(Demagogue)라고 하는데, 신상철은 그런 의미에서 딱 들어맞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상철과 같은 데마고그가 생산한 거짓말이 실종자 가족들의 머릿속에 입력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예전 같으면 경기도 안산 사람이 전라남도 진도읍의 산 속으로 왔을 경우 외지와외의 정보 교류가 거의 불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인해 정보 차단이 벽이 사라진 세상이 됐다. 이런 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부작용 중 하나가 유언비어와 같은 거짓 정보의 급속한 확산인데, 이날 바로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된다. 자녀의 실종 소식에 망연자실한 부모들은 종편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지만 외부에 거주하는 그들의 친인척들은 그렇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의 친인척들은 적극적으로 진위가 가려지지 않는 여러 ‘최신 정보’들을 접하고 ‘퍼나르기’를 통해 실종자 가족들의 스마트폰으로 ‘최신정보’들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조본부를 운영하던 해경조차 이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그날 오전에 사력을 다한 구조가 종료되고 인간적인 한계에 직면한 체 세월호의 침몰을 지켜본 다음, 이날 오후부터 마지막 생존자의 확인을 위한 잠수 수색과 인양 단계로 넘어가는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난데없이 ‘에어포켓’을 주장하며 ‘선내 에어 공급’을 하라는 독촉이 학부모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침몰선 에어 공급은 두 가지 합리성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는 인양을 위한 선체의 부력 유지였다. 두 번째는 정말 생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위해서였다. 이 상황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실종자 가족을 설득하느니 그들의 요구대로 따르는 편이 선체 부력 유지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었다. 해경 지휘부는 이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가고 있었다. 거짓말이 대중에게 옮겨가면 국가기관도 합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분노의 불꽃 6. 에어포켓과 생존 가능성이 민간 잠수사들을 흥분시키다.

한편, 사고 첫날 저녁 무렵에는 신상철 씨의 ‘에어포켓’이 단연 최고의 주제가 될 정도였다. 그의 이런 주장은 종편에 출연하던 많은 평론가와 전문가란 사람들에 의해 증폭된다. 한술 더 떠 이날 밤부터 에어포켓속의 생존자를 가장한 거짓 문자 메시지 등이 난무하기 시작하고 언론은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해 상심한 실종자 가족과 전 국민을 깜빡 속게 만든다. 에어포켓을 기억하는 사람들일수록 쉽게 속을 만한 생존자들의 카톡 메시지가 만들어져 유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실종자 가족들이 다시 한 번 속임수에 걸려드는 黑色戲劇(흑색희극), ‘블랙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팽목항에서는 민간 잠수사들과 해경과의 충돌이 발생했다.

재난이 발생하면 영웅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물론 그들 중에는 구조능력을 가지고 실제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다.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공직자들은 이들의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옳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팽목항으로 민간 자원봉사 잠수사들이 집결했다. 이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자도 있었고, 구조를 통한 수당을 고려한 잠수사들도 있었으며,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사람들도 포함됐다.

국민의 해상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海警은 팽목항에 모여든 민간 자원봉사 잠수사들의 접근을 위협하다며 막았다. 사고 현장은 팽목항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어 팽목항에 모여든 잠수사들은 현장 사정을 몰랐다. 모여든 잠수사들 가운데 유속 2노트 이상의 수중을 잠수해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방송에서 에어포켓 운운하며 아직 생존할 가능성을 크게 잡는 보도가 나오자 민간 잠수사들은 빨리 가고자 애썼다. 이들은 너도나도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가야 한다고 외쳤다. 그럴수록 안전을 담당하는 海警은 끝내 이들의 접근을 통제했고, 통제당한 민간 잠수사들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海警이 구조를 막고 있다”고, “海警 때문에 사람이 죽어간다”고 외쳤다. 海警에게 “살인자”라고도 외쳤다.

일부 유가족들은 海警을 불신한 나머지 自費(자비)로 민간 잠수사들을 어선에 태워 현장 해역으로 진입했다. 그 민간 잠수사들은 海警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그러나 1분도 안 돼 떠내려가면서 “살려줘”를 연발했다. 그들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된 뒤 바람처럼 현장에서 사라져 버렸다. 2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막아야 했던 현장의 해경들은 최대한 검증되지 않은 잠수사들의 잠수를 가로막았고 잠수를 못한 이

들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최대한 해경 비난에 가세했다.

‘그 바다’를 아는 사람들은 침몰한 지 몇 시간 후면 이미 사망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다밑 가라앉은 배에서도 ‘살아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언론과 방송은 후자측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리고 손국민을 상대로 아직 배 안에 생존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손에 땀을 쥐는 중계방송을 계속해 갔다. 덩달아 “에어포켓에서 72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로써 민간 잠수사들은 최소한 72시간 동안은 海警을 비판하며 무력화할 명분과 기회를 얻은 셈이 되었다.

차분하게 짚어보면 생존자를 위한 에어포켓은 존재할 수 없는 배였고, 당시 선박 전문가들은 전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헛된 희망을 키워가는 일부 방송 평론가와 자칭 전문가란 사람들이 방송에서도 ‘에어포켓’을 떠들었다. 그럴수록 시청률이 높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거짓 희망을 부풀릴수록 시청률은 상종가였다.

방송과 언론, 여기에 민간 잠수사들이 가세하여 또 다른 유언비어가 생성되고 있었다. 그들의 주장이 힘을 얻을수록 해경은 장애물이었고 쓸모없는 집단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저녁이 찾아오고 있었다.

분노의 불꽃 7. 흥분한 군중은 모든 유언비어의 매개자.

흥분한 군중이 인화물질로 변해갈 때 유언비어는 불꽃이 되어 폭발을 유도한다. 인화물질과 불꽃의 찰떡 궁합처럼 흥분한 군중은 어떤 헛소문이건 진위구별을 포기한 채 무조건 집어 삼킨다. 이들은 유언비어를 삼키며 다시 증폭시켜 토해낸다. 군중이 유언비어의 희생자이자 매개자인 셈이다. 이런 군중을 통제할 매뉴얼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흥분한 군중에게 튀어 오르는 불꽃같은 유언비어들로 폭발력은 점증하기만 한다. 사고 당일 밤, 팽목항에서 벌어진 사건을 들여다보자.

오후 5시경.

팽목항 대합실 부근에 모인 실종자 가족들은 10여 명이 되어 있었다. 이들은 제복차림의 해경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목포 해경서 정보과는 공용철 경장을 현장에 파견시켜 두었다. 넥타이 없는 양복 차림의 공용철 경장이 구경꾼처럼 가까이 가 보니 실종자 가족들이 해경의 멱살을 붙잡고 “빨리 사고 현장으로 가야 하니 배를 대라”고 야단이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세월호 승객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애가 탔을 것이고, 한시가 급했을 것이다. 그런 시비가 5분이 멀다하고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었다.

사고 해역에 묘박중인 3009함과 서해청 상황실에서 수색 구조 회의를 하고 있는 해경의 지휘부는 아직 팽목항에 도착하지 않았고, 이곳에 나와 있는 해경들은 진도 파출소 인력으로 배를 출항시킬 아무런 권한도 없는 말단 경찰관들이었다. 공 경장은 목포 정보과로 전화보고를 통해 제복 차림의 해경들을 유가족들이 보이지 않는 외곽으로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올렸다. 그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함선 근무자가 아닌 해경들은 사복 차림이 아닐 경우 팽목항 외곽으로 근무 위치를 바꾸게 된다.

그 무렵 팽목항의 대다수 구조직 공무원들도 세월호의 많은 생존자들이 아직도 어느 섬에 있다고 믿고 있었고 사고 현장에서는 선체 수색작업이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 사고 현장의 물속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었다. 생존하리라 믿는 공무원들도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어선들도 그렇게 많이 나갔고 하니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들 했다. 게다가 어디선가 에어포켓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선체 안에도 생존자들이 갇혀 있다는 말들이 돌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된 공 경장은 자신도 미심쩍어 해경이나 뱃사람들에게 선체 내부의 생존자 여부에 대해 묻고 다녔다. 하지만 그 바다의 상황을 알 만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떨구면서 “절망적이라고 봐야지 뭐…”라고 답했다.

재난 발생시 정확한 정보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해경이나 해수부 혹은 안행부는 이런 조직을 급조해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조차 유연비에 휩쓸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

오후 5시30분

팽목항 대합실 앞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실종자 가족들이 점점 불어나 50여 명이 되었다. 그 대신 오후까지 그곳을 가득 메운 구조요원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오후 6시.

대책본부와 실종자 가족 대기소가 진도군 실내체육관이었는데 답답한 가족들이 팽목항 대합실 앞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어둠이 내리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100여 명으로 늘어났다. 팽목항 뒤편의 산들이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면서 팽목항 대합실 주변만 환한 불빛이 고여 있는데 이곳으로 분노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여기저기서 울음과 욕설과 싸우는 소리가 났다. 이들은 해경을 찾다가 제복 입은 해경이 보이지 않자 제복 입은 공무원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소방과 경찰이 천막을 치고 테이블과 상황판을 놓아두고 있었으니 누가 봐도 이곳이 지휘소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종자 가족들은 이곳에 책임지고 현장 상황을 설명할 만한 지휘관이 없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 분노는 오래지 않아 해경 지휘부를 향하고 있었다.

오후 6시30분

실종자 가족들은 금새 2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점점 더 불어나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내리면서 조명등 외곽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무렵에는 3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들을 따라 취재기자들도 들어오고 있었다. 줄잡아 500~600여 명이 몰려들었다. 해경의 진도파출소 김성식(경감) 소장이 이들을 맞았다. 답답함이 폭발 직전으로 몰렸던 실종자 가족들은 김 소장에게 고함치듯 질문거리를 던져댔다. 마이크나 확성기 같은 도구도 없는 맨바닥에서 즉석으로 상황 설명을 해야만 했다. 김 소장이 물양장 쪽을 등지고 유가족들이 반원을 그리며 에워싸고 있었다. 김 소장이 설명을 시작했다.

“여러분들 가슴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현재 우리 해경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런 곳으로 지금 이 밤에 배를 타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설명이 중단됐다.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가 일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원하는 답이 아닐 경우 설명을 중단시키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느냐”는 식의 반론을 폈다. 그 반론에 따라 답변을 해 가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왜 안되냐”는 반론이 나왔다. 그 사이에 많은 실종자 가족들이 분노 섞인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식의 질의응답이 서너 번 가더니 결국 “야 이 새끼야, 너희 지휘부 나와” 하며 욕설이 등장했다. 해경은 필요 없다는 소리와 함께 욕설들이 난무했다. 제복 입은 공무원들을 향한 욕설이 뇌관처럼 작동했다. 거의 동시에 누군가가 현장의 상황실용 간이 책상을 뒤집어엎었다. 그 옆에서도 집기를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이 현장 상황실의 간이 책상과 의자 같은 집기들은 이날 밤 이후 일주일 동안 매일 대여섯 번씩 뒤집어엎는 도구로 사용됐다.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된 것이다.

그날 밤 팽목항의 제복 입은 공무원들은 모두 겁에 질렸다. 육경과 소방 지휘부가 다 나와 있었지만 이들은 현장 상황을 이해시킬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공 경장은 “실종자 가족들도 이해가 갔다”고 회상했다. “아들딸들이 저 바다 속에 갇혀 있다는데 이 상황을 지휘하는 사람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이해가 갔으니까요.”

공 경장은 그때 비로소 정부의 재난 대비 프로그램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가라앉는 배 안으로 들어가 수색하라는 말도 안되는 매뉴얼을 만들고 강도 높은 훈련

이나 하라는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 매뉴얼은 엄청나게 몰려드는 분노한 유가족들을 상대하면서 어떻게 이들을 진정시키고 이해시키면서 통제하느냐 하는 매뉴얼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없었던 겁니다.”

조급한 실종자 가족들에게 객관적이고 사실에 바탕을 둔 설명을 해주고 이해시키려는 조직적 대응이 필요했었다. 그러자면 현장을 잘 이해하고 동시에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해경 수뇌부가 실종자 가족들과 소통을 했어야만 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현장 상황실과 긴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그날 현장에서는 그런 사람도 조직도 존재하지 않았다.

공용철 경장의 현장에서 알아차린 값진 깨달음은 그러나 사고 발생 2년이 다 되도록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해경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발족되었지만 세월호 사건의 재조사나 재검토는 하지 못했다. 그저 정치적 생색내기로 버티는 중이다. 당시 현장으로 가 보자.

분노의 불꽃 8. 상황 오인으로 인한 유연비어 유포

오후 6시50분

팽목항에서 난리가 벌어지던 그 시각, P106정에 승선한 기자 22명이 세월호 침몰 해역에 도착했다. 경비정들이 비추는 서치라이트 불빛에 의존해 사진촬영을 했지만 긴박한 수색작업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강한 조류와 視界(시계) 불량 등의 현장 사정이 사진에 담겨지지 않았다.

약 1시간 전에 해군 SSU 대원들이 세월호 선체 3층 외부계단에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설치한 것이 이날 잠수 수색구조의 최대 성과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도사진 촬영이 불가능해 해경으로서는 알릴만한 장면을 제공하지 못했다.

오후 7시00분

어둠 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 침몰해역은 대한민국 해양 구조 세력의 집합소가 되고 있었다. 당시 해역엔 해경 함정 78척과 해군 함정 24척, 관공선 12척 및 민간선박 44척 등 총 168척이 동원되어 사고지점에서 동심원을 형성하며 수상 수색을 지속하고 있었다. 해경 구조대 283명, 해군 구조대 229명(UDT:115명, SSU 114명) 등 512명의 잠수 구조대원들도 함상에서 금방이라도 잠수할 수 있도록 잠수복을 입은 채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잠수를 위한 전용 바지선도 없었고 오직 短艇(단정)에서 스쿠버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빠른 조류로 물때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공중에서는 해경 14대, 해군 4대,

공군 6대, 육군 2대, 소방 3대의 헬기와 수송기 등 총 29대의 항공기가 동원됐다. 어둠이 짙어지자 해경 지휘부는 공군에 조명탄 투하를 요청한다.

오후 7시20분

공군의 쌍발 프로펠러 중형 수송기 CN-235가 세월호 해역 상공을 약 1시간 동안 순회하며 70발의 조명탄을 투하했다. 투하된 조명탄은 한 발당 약 4분간 체공하면서 사고 해역 주변을 밝혔다. 수색에 참여한 함정과 선박들은 이 빛에 의존하며 부유물과 시신을 찾고 있었다. 이후 이날 밤 자정까지 조명탄은 20시30분(공군: 83발), 21시24분(해경 남해청: 50발), 22시30분(공군: 100발), 등 총 303발을 투하했고 다음날 새벽까지 총 669발의 조명탄을 투하했다. 이 과정에서 표류 屍身(시신) 5구를 발견, 인양했다.

이 시각, 3009함 상황실에서 인양 전문가들의 의견청취가 필요해지자 해경청장은 헬기를 이용해 목포에 위치한 해양경찰 서해청으로 이동했다.

오후 7시30분

아수라장으로 변한 팽목항에서 김 서장은 핸드마이크가 절실했다. 육성으로는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공 경장에게 핸드마이크를 부탁한다.

오후 8시10분.

공 경장이 핸드 마이크를 구해 돌아왔다. 그때 팽목항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의 사고 해역 방문을 위한 민간 선박 3척이 준비되어 있었다. 목포서 정보과에서는 공 경장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반드시 선두의 배를 타고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행동하며 안전사고를 막을 것.”

공 경장은 맨 앞의 배에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올랐다. 감히 자신의 신분을 해경이라고 밝힐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도 실종자 가족처럼 행세하고 있었다. 세 척의 배에는 약 80여 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나누어 타고 있었다.

오후 8시20분.

배가 출발하자 공 경장은 겁에 질린 선장에게 다가가 낮은 음성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라고 언질을 주었다. 선장도 비로소 안심하며 공 경장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암시를 주었다. 그 배에 승선한 실종자 가족들 중에는 팽목항에서부터 남들과 달리 리더십을 보였던 남자도 함께 타고 있었다. 팽목항에서 몇 번의 난장판 속에 공무원들과의 목살잡이가 벌어졌을 때마다 그 남자가 나서서 사태를 진정시키며 흥분한 가족들에게 이렇게 나무랐다.

“절대 공무원들은 때리지 맙시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서 고생하는 공무원

들을 때립니까. 저 뒷사람들이 문제지 여기 나와서 고생하는 공무원들한테 손찌검 같은 거 하지 맙시다.”

그가 이런 말로 흥분한 실종자 가족들을 나무라면 신기하게도 실종자 가족들이 그때마다 그의 말에는 수긍하고 폭행을 중단하곤 했었다. 공 경장은 그 사람을 팽목항에서 며칠 동안 목격한 실종자 가족들 중에는 가장 말이 잘 통할 것 같은 합리적인 사람이었다고 기억한다.

거짓 희망의 공유

막막한 밤바다로 나오자 주위는 엔진소리뿐 다른 소음이 없었다. 그러자 실종자 가족들끼리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소식들을 나누고 있었다. 절망과 희망이 범벅된 소식들이었다. 한 사람은 “페이스북에서 해경구조대가 남편이라는데 물 속에 들어가 보니까 유리창으로 시신이 가득했다고 하던데…”라고 했다. 특히 “오늘 오후에 어떤 학부모가 배 안에서 아들이 보낸 문자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직 살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확실한 증거라니까요”라고 했다. 이 소리에 모두 들뜨기 시작했다. 공 경장이 옆에서 들어보니 딱히 아니라고 말해주기도 어려웠다. 자신도 확인하지 못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었다. “희망을 가집시다”라고 말해주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희망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산이 잘 되질 않았다. 그는 하염없이 담배를 피워댔다. 이 난국에 담배마저 없었다면 어쩔을까 싶었다고 한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었다. 그래도 담배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 대합실 옆 슈퍼에서 미리 세 갑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는데 잘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공 경장은 다음 날 저녁까지 컵라면 하나를 먹은 것이 전부였다.

배가 항해하는 동안 격분한 실종자 가족들이 뱃머리에 나와 울부짖기도 했지만 바다의 상황은 2m 이상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출항한 지 30분 정도가 지나자 실종자 가족들은 하나 둘 씩 선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뱃멀미가 난 것이다. 나중에는 공 경장을 포함해 서너 사람만이 갑판에 남았다. 밤하늘 저편이 오렌지빛으로 환하게 밝아졌다 이내 사라지곤 했다. 조명탄이 투하되는 중이었다.

오후 09시35분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뒤집힌 채 물 속으로 거의 가라앉은 세월호에 접근하는 동안 사람들은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대여섯 발의 조명탄들이 한꺼번에 터질 때는 대낮처럼 밝았다. 船首(선수) 하단을 물 밖으로 내민 채 가라앉은 세월호에도 주홍색 조명 빛이 흐르면서 진한 그림자를 바다 위로 일렁이게 했다. 해군이 세월호에 연결한 부이가

등등 떠 있었다. 그 주변으로는 모터 소음을 내는 해경과 해군의 고속단정 여러 척이 잠수대원들을 태운 채 흰 물거품으로 밤바다를 가르며 오가고 있었다. 해상수색 중이었다. 당시 세월호 주변의 조류가 3.9노트를 기록하고 있었다. 초속 1.95m로 물이 흐르는 중이었다. 그러나 선실 밖으로 나와 본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수백 명의 잠수부들이 들락거릴 줄 알았던 물속으로는 아무도 들어가고 있질 않았다. 실종자 가족들은 갑판으로 몰려나와 세월호를 향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몇 사람은 직접 들어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공 경장이 달려나가 이런 사람들을 끌어 앉히느라 애를 먹었다. 그를 도와준 사람도 예의 공무원 편을 든 실종자 가족이었다.

바로 저 검은 물 아래에는 지금도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벌 벌 떨어가며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에 공기라도 주입해야 할 것 아닌가.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게 안 되면 크레인이라도 불러 빨리 배를 들어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해경은 무얼 하고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가. 자기네들 자식이 저렇게 있더라도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오전부터 1분 1초가 급박해서 안산에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니! 수백 명이라던 잠수부 그림자도 볼 수 없다니!

가족들의 비명 섞인 통곡이 원성으로 바뀌면서 밤바다를 메웠다. 모두가 분노했다.

당장 저 해경 지휘함으로 가자고. 우리가 해경 지휘부 놈들을 만나야 된다고, 빨리 배를 그리 대라고. 세 척의 배 모두가 같은 외침을 하기 시작했다. 공 경장이 탄 배가 선두여서 나머지 배들은 공 경장이 탄 배의 항로를 따라 움직였다. 실종자 가족들이 곧장 선장실로 몰려갔다.

“선장! 빨리 저 3009함으로 배를 대시오.”

“갓다 대란 말시오.”

“당신 자식이 저 밑에 있다면 가만있겠소.”

선장은 거의 패닉 상태로 가고 있었다. 배를 평생 몰아봤지만 수십 명이 배 안에서 선장을 협박하는 상황은 처음이었다. 뱃머리를 500m가량 떨어져 묘박 중인 3009함으로 향하지 않으면 당장에라도 선장을 내칠 기세였다. 선장이 잡은 키가 서서히 돌면서 배가 3009함을 향하자 고함소리가 조금 잦아들기는 했지만 협박하는 강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파도를 타고 아래 위로 2m를 오르내리는 배가 3009함과 거리가 좁혀가고 있었다. 공 경장은 이대로 3009함에 배를 대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것이란 걸 알았다. 3009함에 흥분한 실종자 가족들이 올라가서 벌일 일들이 눈에 선했다. 그는 실종자 가족들 틈 속으로 파고

들어 선장실로 들어가면서 외쳤다.

“선장님. 거기 배 대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서 사고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지금 저 큰 배로 올라 탈 수가 없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위험합니다. 조금 진정하시고 기다려 봅시다. 파도가 심해서 잠수를 못 하는 걸 겁니다. 停潮(정조) 때가 되면 잠수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는 다시 선장을 행해서 소리쳤다.

“선장님! 절대 안 됩니다! 배 대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실종자 가족들 중 몇몇이 공 경장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냈다.

“아니 왜 당신은 꼭 해경같이 굴어? 당신 해경이야? 왜 해경 편을 들어?”

“아닙니다. 저도…”

긴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3009함에 다가갈수록 조금씩 가족들의 분노도 수그러들었다. 실종자 가족을 태운 선박이 3009함 측면으로 접근해 보니 두 배가 위 아래로 2m 이상 오르내린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것이다. 3009함의 선체가 워낙 높은 데다 그곳을 오르려면 밧줄로 이어진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야 한다는 걸 알게 되자 이것조차 쉽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선장은 서서히 배를 세월호 쪽으로 돌렸다. 가족들은 체념 섞인 울음을 터뜨리며 아이들 이름을 부르다 하나 둘씩 선실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멀미가 심해진 것이다. 세월호 선체 주위를 다시 한 바퀴 선회하는 동안 배 위에는 공 경장을 포함해 네 사람만 남게 됐다. 모두 돌아가길 원했다. 다른 두 배들도 마찬가지였다. 공 경장은 선장에게 조용히 “이제 돌아갑시다”라고 했다. 배는 천천히 방향을 바꾸어 팽목항으로 향했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간신히 고비를 넘긴 공 경장이 갑판 난간에 기대서서 담배를 물었다. 그러자 팽목항에서 공무원들에게 손찌검하지 말라며 실종자 가족들을 나무랐던 사내가 공 경장 옆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 불붙이지 않은 담배가 들려 있었다. 공 경장이 얼른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여 주었다. 그는 길게 한 모금을 빨더니 밤하늘로 연기를 내뿜었다. 그가 공 경장에게 말을 걸었다.

“해경이시지요? 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예. 안전사고 때문에 제가…”

그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김병권이라고 합니다”라며 손을 내밀었다. 공 경장도 이

름을 대며 악수를 나누었다. 본의 아니게 서로가 통성명을 하게 됐다. 두 팔을 굽혀 난간에 기대면 그가 다시 담배를 길게 한 모금 마시더니 공 경장의 눈을 뚫어져라 보면서 말이 이었다.

“공 경장님. 해경이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제 딸이 저 배 안에 갇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진짜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는 울고 있었다. 공 경장은 그의 시선을 피한 채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숨이 나왔다.

“글쎄요. 아직은 모르니까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공 경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훗날 기자를 만난 공 경장은 이렇게 털어놓았다.

“가망 없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만한 나이의 딸을 키우고 있는데 그 심정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왔지요.”

그때부터 김병권 씨는 평평 울었다. 그 사내가 훗날 세월호 유가족 대표가 된다. 그리고 9월17일 새벽,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됐고, 다음날 왼팔에 깁스를 한 채 언론을 탔다. 공 경장의 말을 들어보자.

“처음에는 참 합리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유가족 대표가 되고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팽목항에서 봤을 때는 저만한 사람도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잡아가고 어떤 위험한 선을 넘지 않도록 애쓴 사람이, 그 김병권 씨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하긴, 그 유가족 대표를 하다 보면 성질도 다 망가지게 될 겁니다만….”

11시00분경

팽목항에서 출발한 민간 선박 세 척이 세월호 해역을 둘러보고 다시 팽목항 선착장으로 입항했다. 물양장과는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이다. 팽목항에 모여 있던 실종자 가족들과 기자들, 구조직 공무원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선착장으로 몰려들었다. 모두 궁금해하고 있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보고회를 갖는 게 자연스러웠다. 상황실이 설치된 물양장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공 경장은 아무 소리 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고회가 열릴 수 없었다. 물양장 쪽으로 가는 사이에 기다리던 사람들과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 보니 어때요?”

“쥐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뭐? 잠수부가 수백 명이라고? 잠수부 그림자도 못 봤어요. 나쁜 놈의 새끼들.”

“우리 애가 저 안에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한단 말이에요?”

“하여간 전부 거짓말이라고요.”

이 대화가 삽시간에 군중 속으로 퍼져 나갔다. 그 자리에 있던 진도군청 텐트 속 집기들이 공무원들을 향해 날아다녔다. 소방청, 경찰청, 해경청의 텐트 속 집기들도 전부 같은 신세가 됐다. 경비를 서던 의경들이 뺨을 맞고 멱살을 잡혔다. 사진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기자 놈들도 다 똑같아. 뭐? 잠수를 하고 있다고? 에라 이 거짓부렁하는 놈들” 하며 언론을 비난했다. 성난 실종자 가족들은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면서 “너희 기자 새끼들. 사진 찍으면 다 죽여 버리겠어”라며 촬영을 막았다.

사진기자들이 제일 먼저 카메라 렌즈를 손바닥으로 감싸며 뒤로 물러났다. 스마트폰으로 문자작성을 하던 젊은 기자들은 그런 사진기자들을 의아한 듯 바라보았다. 그 순간 여기서 기서 스마트 폰이 실종자 가족들의 손으로 낚아채지더니 줄지에 공중으로 포물선을 그렸다. 높이 던져진 스마트 폰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수십 대의 스마트 폰이 바닷물 속으로 떨어졌고 열댓 개는 육지 쪽 아스팔트나 군중 속으로 떨어져 액정화면이 박살나고 있었다.

언론의 세월호 선동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제복 입은 공무원도 적이었지만 그때부터 기자들도 그들의 적이 되었다. 특히 공중파 방송이 이들로부터 제일 먼저 배척당했다. 이를 계기로 <고발뉴스>, <팩트TV>, <아프리카TV> 같은 인터넷 방송과 여러 종편 채널들이 세월호 현장에서 취재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무조건 실종자 가족을 편드는 보도로 일관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현장에서는 배척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 가족을 편드는 경쟁으로 변해갔다. <고발뉴스>의 이상호 PD는 다이빙 벨의 전담 방송사처럼 활약했고 나중엔 이 영상을 편집해 영화까지 만들었다. 선동적인 내용들은 주로 이런 방송들이 주도했다. 반정부 성향의 인사들도 한발을 집어 넣기 시작했다. 이처럼 동정받아야 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득을 취한 자들이 雨後竹筍(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그 무렵 진도 파출소장 김성식 경감 옆에 본청의 정보수사국장 이용욱 경무관이 해경의 지휘부를 대신해 나와 있었다. 그가 실종자 가족들을 대면하고 있었지만 분노한 군중들 앞

에서는 어떤 설득도 가능하지 않았다. 선착장에서 물량장으로 이동해 오는 성난 가족들은 500여 명이나 됐다. 이들이 김 서장과 이 국장을 에워싸면서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다. 핸드 마이크도 소용없었다. 그냥 주변에서 날아오는 말소리에 반응이나 하면 다행이었다. 김 성식 서장이나 이용욱 국장은 이들의 분노가 어떻게 촉발됐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왜 잠수도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을 죽일 셈이냐”로 따졌고 사고 현장을 모르는 두 사람은 상식적인 이야기만 꺼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해도 실종자 가족들을 진정시키기는커녕 더욱 분노만 부채질할 뿐이었다.

현장상황의 오인에서 발생한 유언비어가 군중을 흥분시키면 이 틈을 비집고 카톡같은 SNS를 통해 조작된 소문이 유입된다 그러면 군중은 더더욱 흥분한다. 이날 밤이 그랬다.

급히 상황실과 통화한 이용욱 국장이 현재 진행상황을 다시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군중 속에서 스마트 폰을 들고 큰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SNS를 통해 퍼져가는 카톡 메시지를 읽는 중이었다. 갑자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조금 전에, 10시 20분에 카톡입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저 승진이에요.’ 아직 아이들이 저 밑에서 살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니들은 빨리 안 구하고 뭐 해. 카톡이 이렇게,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분노의 함성이 일면서 멱살잡이가 시작됐다. 이용욱 국장이 타겟이 됐다. 그때부터 이용욱 국장은 다른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미안합니다”와 “죄송합니다”란 말로 일관했다. 때리는 자들과 말리는 자들의 팔과 손들이 이용욱 국장의 면전에서 성난 파도처럼 출렁거렸다. 그의 뺨에서는 여러 차례 소리가 났다. 이용욱 국장은 며칠 뒤인 4월 말경 TV조선의 ‘구원파 신도였던 이용욱 국장은 유병언 장학생이었다’란 특종을 가장한 誤報(오보)에 시달리다 결국 경찰복을 벗게 된다. 10년 전 교회를 옮기면서 연락을 끊었다고 했지만 이미 ‘주홍글씨’ 같은 낙인이 찍혀 버렸다. 그후 검찰은 그와 청해진 해운과의 관계를 무리하게 엮어 기소하고 있었다.

현장상황을 멋대로 이해해버린 실종자 가족들의 흥분은 유언비어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짧은 순간이지만 ‘잠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잠수를 기피하는 상황’으로 오인하면서 유언비어가 탄생하고 있었다. 그것이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를 부추겼고 팽목항으로 돌아온 이들은 기다리던 군중들에게 고스란히 분노를 전파시켰다. 군중 속에는 실종자 가족뿐 아니라 취재진도 포함됐다. 언론과 방송도 유언비어의 세례를 받고 있었다. 거기에 SNS로 조작된 소문이 연료처럼 공급되고 있었다.

문제는, 군중의 심리변화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항구에 나와 군중들과

대면하던 해양경찰관들이었다. 그들은 방탄조끼없이 총알받이로 내몰린 셈이었다. 자신들보다 더 현장감 넘치는 질문들을 쏟아내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현장상황을 모르는 해경들은 분노의 폭력을 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다. 세월호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이런 사태를 회피할 수 있을까?

분노의 불꽃 9. SNS 카톡...

그날 밤 군중을 흥분시킨 카톡 메시지는 그것 말고도 또 있었다.

4월16일 오후 10시40분

‘아진짜전화안터져문자도안되게노뭐도안되데달체문자니까지금여기배안인데사람있거든아무것도안보이는데남자애드ㅡㄹ몇몇이랑여자애들울고있어나아직안죽었으니까아네사람있다고좀말해줄래’

4월16일 11시24분

‘트위터 아이디가 없어서 여기다가 글 올립니다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단원고 2학년 *반 이**입니다 선미 쪽에 있는데 유리창 깨질가봐 무섭네요 구조대 안와요? 댓글밖에 안 써져요’

이런 카톡들이 실종자 가족들의 스마트 폰으로 속속 들어오다 보니 현장에서 아무리 설명을 잘하려 해도 허위정보의 위력을 감당할 수 없었다. 지난 밤 선상에서 불꽃놀이를 즐기던 승객의 가족들이 지금 팽목항에서 분노의 노예가 되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진도군 실내체육관에 남아있던 가족들도 이 카톡 메시지에 환성을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는 해경을 적으로 삼고 있었다. 누구라도 그날 오전의 구조 상황에 대해 해경의 노력을 평가하지 않았다. 모두 “제 발로 걸어나왔다”고 했다.

동정받아야 할 사람들이 선동에 놀아나면서 분노의 화신으로 변해갔다. 이들은 그 대가로 국민의 외면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갔지만 당사자들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와중에 선동을 일삼은 측들은 모종의 이득을 챙겨가고 있었다.

이로써 4월16일 오전 08시48분 여객선 침몰사고로 발생한 제1차 재난은 14시간쯤 지나면서 제2차 재난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구조의 성공, 복구의 실패, 재난의 확산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불과 14시간 동안 실종자 가족 등 군중들을 분노의 노예로 변하게 만드는 각종 유언비어들은 9차례나 등장하고 있었다. 언론과 방송의 속보경쟁과 공보 담당자들의 미숙한 대처, 희생양을 찾기 위한 언론과 방송의 의도적 왜곡, 데마고그의 등장,

유언비어에 놀아나는 자원봉사자, 유언비어를 매개하는 군증들, 상황오인이 만드는 유언비어, 카톡 같은 SNS의 유입.....

유언비어들의 진화

첫날밤이 저물고 두 번째 날이 되었을때 새로운 유언비어들이 등장한다. 첫날보다 한층 더 정교한 모습을 한 유언비어들은 생명력도 길다. 대표적인 유언비어는 데마고그 신상철에 의해 탄생한 다이빙 벨이다. 다이빙 벨의 탄생과정을 추적해 보자.

분노의 불꽃 10. 다이빙 벨

참고로,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당시 신상철씨는 자신의 해군 중위 경력을 바탕으로 해양 선박 용어들을 적절히 구사하며 천안함은 폭침이 아닌 좌초라고 주장해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당시 그는 총 34가지의 의문들을 제시하며 세인의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특히 그는 ‘군당국이 천안함 침몰 이유를 조작하기 위해 고의로 구조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고, ‘국방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 씨의 좌초설을 뒷받침하며 전문가 행세를 한 수중 구난 업자가 알파 잠수 대표 이종인씨였다. 천안함 당시 이 두 사람이 세트 플레이를 펼쳤던 것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신상철은 어김없이 첫날부터 등장했다. 그는 사건 첫날 ‘에어포켓’이란 용어를 자신의 웹사이트 <서프라이즈>에 기고하면서 언론과 방송의 주목을 받는데 성공한다. 언론과 방송이 과거 천안함 당시 그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사건 다음날인 4월 17일, ‘다이빙 벨’을 들고 나온다. ‘에어포켓’이 먹혀 생존자가 있다는 대중의 믿음을 확보해야 ‘다이빙 벨’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다이빙 벨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종인’씨를 극찬하며 치켜세우는 글을 올린다. 일부를 발췌해 본다.

<(중략) 제가 알고 있는 한, 바다에 침몰한 선박에 대한 인양과 침몰된 선박 내에 갇힌 조난자에 대한 구조에 있어 최고의 민간 전문가는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입니다. 그는 인하대 조선공학 전공으로 잠수와 인양업계에서 30년간 뼈가 굵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인양업체의 규모에 있어서는 천안함 때 인양을 맡았던 88수중개발 등 대형 인양업체가 있고 그 업체들 역시 현재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 시간 선박 내에

간혀 있는 승객에 대한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 잠수부들의 접근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등에 대한 판단과 조연에 있어 그를 능가할 전문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문제점은,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나치게 관료적 접근과 고집을 고수함으로써 인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의 경우, 정부와 군에서는 해군특수부대들 - UDT(수중폭파)와 SSU(심해잠수) 요원만으로 충분하다고 고집 피우며 민간에 협조와 조연조차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는 울분을 터트리더군요.

현재 세월호에 잠수부들이 접근하기 힘든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빠른 유속의 조류>와 <탁한 시야>와 같이 열악한 환경일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잠수부들이 내려가서 구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탁월한 능력과 함께 그가 실제로 적용을 해 보았던 사례에 대해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로부터 실물과 함께 직접 제가 설명들은 바가 있어 아래와 같이 긴급히 소개합니다.(이하 생략)>

이종인 씨의 다이빙 벨은 개방식이어서 강한 조류에는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는 사실을 어지간한 구난 전문가라면 감을 잡을 만도 하다. 그런데 신상철 씨는 ‘실물과 함께 직접 설명들은 바 있다’며 강력 추천하고 있었다. 그의 이런 추천 떡밥을 대다수 언론과 방송들이 달려들어 덩석 물었다.

데마고그 신상철의 유연비어는 생명력이 길다. 뿐만 아니라 진실을 보도한 사람들의 결과물보다 영향력도 더 크다. 그의 ‘에어포켓’이 ‘다이빙 벨’을 불러내고 ‘이종인’씨를 출동시키더니 ‘JTBC의 손석희’와 ‘팩트 TV의 이상호’가 가세했다. 훗날 이상호는 취재필름을 편집한 영화 ‘다이빙 벨’을 버젓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하고 국내 상영관에서 개봉까지 했다. 그 영화 포스터에는 <주연 이종인> 이라 표기되어 있다. 이쯤 되면 ‘신상철-이종인 간의 유착’이 아니고 무엇이라 해야 하나.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두 사람이 헛소문을 주도하더니 이번에도 두 사람은 콤비 플레이를 펼쳤다. 그러나 언론과 방송은 이들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대중매체는 윤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 번 신뢰를 상실하면 신뢰를 회복하기 전에는 대중앞에 내세우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도움이 된다면 전과자조차 버젓이 불러내 카메라 앞에 세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신상철의 경우 앞으로도 어떤 해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등장할 기세다.

대중 앞에 그럴싸한 거짓말을 유포하는 사람을 언론과 방송만이 ‘애용’하지 않는다. 신상

철씨의 경우 민주당의 천안함 진상조사위원회에 추천되기도 했다. 진영싸움에 빠진 정치권 역시 시청률의 노예에 못지않게 데마고그들을 영입해 출세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유언비어 생산 전문가들이 대접받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분노의 불꽃 11. 허언증 환자의 등장

불티 . 허언증 환자 홍가혜

사고 해역을 지키던 해경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격이나 실력이 의심스러운 민간 잠수사들의 入水(입수)를 끝내 막았지만 에어포켓을 믿는 유가족들의 항의에 굴복하고 결국 배 안에 에어를 주입하기로 결정했다. 4월18일 오전 9시34분부터 선체에 접근해 에어 주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언딘 소속의 한 잠수사는 공기 주입기 고장으로 표류하다 구조됐으며 동료 잠수사는 혼자서 에어 주입 작업을 마치고 비상 급상승을 하면서 곧장 치료 챔버로 실려가야 했다. 현장은 살인적인 환경이었고 현장 밖에서는 살인적인 요구를 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날 오전 6시 10분경, 팽목항에 나가있던 MBN 방송은 민간 잠수사를 사칭하는 홍가혜(26)라는 여성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한다”면서 “다른 잠수사가(배 안에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는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내보냈다.

낮 12시에 MBN 보도본부장이 사과방송을 했지만 이미 었질러진 물이 됐다. 첫 방송이 송출되고 6시간 동안 홍가혜의 주장은 SNS를 통해 천리밖으로 퍼져 나갔다. 게다가 그 주장을 토대로 정밀하게 조작된 글들도 SNS를 누볐다. 마치 물 속의 선체 한 공간에서 카톡 문자를 날리고 있다는 절박한 글들이 전국민을 안타까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와 동시에 현장 해역에 나가있던 해경은 일부 민간 잠수사들과 허언증세를 보이는 한 여성들에 의해 ‘죽일 놈’이 되고 있었다.

홍가혜는 방송 이후 진위의 논란이 거세지자 한동안 잠적했다. 그런 사이에 지난 2011년3월, 일본 대지진 당시 MBC TV와 인터뷰한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인터뷰 당시 홍씨는 일본 교민 행세를 하고 있었다.

당시 홍가혜 씨는 "사랑하는 사람도 일본에 있고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고 (한국으로) 가는 것도 웃기고..."라고 말했다.

홍가혜 씨가 일본 교민으로 MBC와 인터뷰한 영상이 재조명되자 누리꾼들은 "홍가혜 왜 저러냐", "홍가혜 일본에 산 것은 맞나?", "홍가혜, 일본에도 살았었구나", "홍가혜, 무서운 여자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언론과 방송, 그리고 SNS 누리꾼이 보여준 표피적인 관심은 이쯤에서 그친다. 더 이상 그녀의 정체에 대해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누구도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홍가혜는 지난 2015년 1월 해경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의 "홍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 등이 수용됐고 구속 중이던 홍 씨는 7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씨에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홍 씨는 무죄를 선고받는다.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의 구조 활동에 대한 거짓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홍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장 판사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 "홍 씨의 SNS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제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시했다.

데마고그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판결은 우리 사회가 유연비어와 같은 분노의 불꽃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양날의 칼이다. 다수가 진실을 믿을 때는 가장 정의로운 사회를 연출하지만 다수가 거짓을 믿기 시작하면 사회는 지옥으로 변한다. 그런데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정의를 추구해야 할 사법부가 다수로 하여금 거짓을 믿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통수권자조차 유언비어에 희생되다

약 한 달간에 걸쳐 유언비어들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사건 발생 3일쯤 지나면 각종 유언비어와 이를 생산해 내는 데마고그들의 활약(?)으로 海警을 향한 언론과 방송의 공격은 더욱 거세진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호가 침몰할 때도 海警은 구경만 했다” “海警은 뭘 했나”로 변해 갔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 172명의 생명을 1시간만에 구조한 사실을 두고 “그냥 배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을 태운 것뿐”이라고도 했다. 동시에 청해진 해운과 海警을 연결시키는 미확인 추측성 보도들이 난무했다. 과거에 구원파 신도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이 언론의 못매를 맞고 결국 옷을 벗었다. 법적으로 유치장에 수감할 수 없는 상황의 이준석 선장을 해경 직원의 집에서 재웠다는 이유만으로 海警 관계자들이 곤욕을 치렀다.

세월호의 침몰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海警의 진도 VTS는 거의 초토화됐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79명의 승객을 구조한 P123정 정장은 그 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수십 차례나 받았다(2014년 8월 초 목포항에서 필자가 그를 만났을 때 33년간 배를 타며 해경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늙은 수병은 너무 지쳐 있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이미 그는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돼 있었다). 그는 현재 과실치사혐의로 구속, 3년 형을 받아 수감중이다.

(흥분한 군종과 언론은 해양구난의 협조세력들을 해경과의 유착세력으로 몰았다.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 구난업체인 ‘언딘’은 해경의 가장 든든한 협조세력이었다. 하지만 검찰과 감사원은 구난업체 언딘과 한국해양구조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통장과 핸드폰까지 압수수색까지 했다. 그러나 해경과의 유착관계는 손톱만큼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 와중에 건설한 중소기업 언딘은 은행권으로부터 합법적 자금 지원이 차단되어 경영난으로 고군분투하다가 2015년 연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정관리인을 2016년 2월 24일인 오늘까지 지정해 주지 않아 해외인양사업을 중단한 채 겨우 숨만 쉬는 중이다. 멀쩡한 ‘창조적 중소기업’ 하나가 언론과 방송의 거짓보도로 ‘창조적 파괴’의 대상이 된 것이다.)

세월호와 관련된 부패와 비리 혐의는 거의 모두 海警이 뒤집어써야 했다. 구조실패와 더불어 해경은 ‘부패’, ‘비리’, ‘무능’의 표상이 됐다. 그럴수록 현장을 책임진 해경은 무모한 희생을 막고자 통제를 계속하면서 잠수 수색작업을 진행해 왔고 언론과 방송은 쉬지 않고 해경을 집단구타해 왔다. 마치 누가 해경을 더 잘 때리나 경쟁하는 듯했다.

흔히 ‘경쟁’은 조직의 부패를 막고 건강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첩경이며 ‘市場’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惡貨(악화)를 驅逐(구축)해 몰아낸다고 한다. 그런데 선정성과 시청률의 경쟁에 몰입한 우리나라의 방송과 언론을 보면 이와 같은 市場經濟의 이론은 들어맞지 않는다. 그들은 선정성과 시청률에 도움이 되면 진실과 거짓의 분별을 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惡貨가 良貨(양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 달이 지나도록 유언비어가 조성한 거짓의 벽은 깨질 줄 몰랐다. 그러다 대통령까지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였고 부정확한 언어구사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2014년 5월19일 오전10시. 대통령은 텔레비전을 통해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눈물까지 흘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해상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두고 ‘고귀한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공개적으로 해 버린 것이다. ‘고귀한 희생’이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이타적 행위의 결과로 사망하는 경우에 수식되는 형용사이다. 가까이는 북한의 폭침에 의한 천안함 전몰장병들이 있고 멀게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부채가 될 미귀환 국군포로들에게 쓰여야 할 용어였다. 수학여행을 가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안타까운 피해자’들이다 ‘고귀한 희생자’는 아니다.

예를 들어 한 도시를 폭동으로 점령하다 정부군에 의해 진압된 사람들을 훗날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분’으로 격상시킬 경우, 이들에 대한 보상 예우차원이 공동체의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야기한다. 더 나아가 국가안위를 위해 진압작전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은 ‘反민주 세력’으로 돌변한다. 세월호 사건도 그런 점에서 하등 다를 바 없었다.

수학여행을 가던 중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두고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표현해도 고인이 된 분들과 피해 가족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다. 가장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해 주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부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대통령의 발언은 또 한번 충격적이었다.

“사고 직후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해경의 구조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3일째인데 청와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해경의 구조실패로 대통령을 속인 셈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발언 뒤에 해경의 구조적인 문제를 조목조목 거론했다. 해경이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서 구조와 구난업무는 등한시 했고, 해양 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경의 인명구조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해경의 수사인력은 해경 전체의 5%밖에 되지 않는다. 육지 경찰에 비해 조직력도 약하고 인적자원도 열악하다. 그런 해경이 외형적 성장을 hrn조와 구난업무를 등한시켰다면 침몰 신고를 받은 지 30분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없다(미국 해안경비대. CoastGuard의 경우 신고접수 후 2시간 이내 사고해역 도착을 규범으로 정해두고 있다). 더구나 기울어져 가는 선체안의 승객을 구조하려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해경의 인명구조훈련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비현실적이었다. 기울어져 침몰하는 배에는 어떤 구조대원도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다. 이처럼 상식밖의 판단들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왔다. 그리고 이날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 나온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서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담화문이 발표되던 이날까지 세월호의 침몰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바 없었고 해경의 구조실패 여부도 정식으로 가려진 바 없었다. 사고 원인과 구조 과정을 ‘진단’도 하기 전에 해경해체라는 ‘처방’부터 내려진 것이다. 이로 인해 60년 된 국가의 필수 안보조직중 하나가 거짓말의 바다속으로 침몰했다. 이날 대통령은 ‘관피아’라는 속어까지 동원해 가며 ‘해경의 구조 실패’를 단언했다. 그리고 ‘해경의 해체’를 선언한 것이다. 어떤 언론도 해경을 제대로 취재한 적이 없었다. 해경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구조 종료를 선언하지 못한 채 장장 210일 동안 잠수수색을 하며 한 해를 보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국가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 통수권자가 사건 발생한 달 여 뒤에도 오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유언비어의 해악성을 넘어 정보수집, 판단, 검증, 배포의 과정 자체가 유언비어 만큼이나 질이 나쁘다는 것 말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국민을 승객으로 신고 향해 중인 대한민국호는 지금도 이 과정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맺는 말.

전근대와 근대의 구분법 중 하나는 ‘주먹구구의 시대’와 ‘계량(計量)의 시대’일 것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시대의 금기를 깨뜨리기 위해 몸부림치던 이면에는 주자학적 폭력구조가 갖는 비사실적 인식론에 대한 저항이며 도전이었다. 지구촌의 깨어있는 집단들은 신화의 시대에서 잠을 깨고 일어나 인식의 지평에 눈을 돌렸다. 일찍 달려간 집단들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거의 2백년이나 늦게 산업혁명의 막차를 탄 국가이다.

오늘날 스마트 폰과 자동차의 첨단 기술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대한민국의 인문계열들은 어떤 수준으로 역사를 기록해 가는지 세월호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

정확한 정보에 의한 합당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당한 집단은 대처 후 복구단계를 통해 집단의 아픔을 봉합하고 다시 건강한 조직체로 거듭난다. 그런데 세월호는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의사결정들이 연속해서 내려졌다. 어느 누구도 이런 실수를 막지 못했다. 방송과 언론들은 이 와중에 선정성 경쟁에 몰입하면서 거짓 정보의 유출과 확산에 가세했다. 이로 인해 세월호 사건은 거짓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다.

보스턴 폭탄 테러 사건의 복구과정

21세기의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인류는 갑작스럽게 닥쳐온 재난 앞에서 당황하게 돼 있다. 패닉에 빠지고 생존욕구에 내몰려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마구 내리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이 재난 초기에 보여주는 심리적 반응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충격파가 지나간 직후부터는 국가간 대응 수준이 확연히 다르다.

모범적 모델로 삼을 만한 국가는 미국이다. 세월호 1년 하고도 하루 전인 2013년 4월15일, 미국 보스턴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결승점 가까이에서 전기밧솔 안에 감춰둔 컴퓨터 폭약이 폭발함으로써 246명이 부상하고 3명이 사망한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보스턴 주민과 그 지역 언론들은 충격과 슬픔을 자제한 채 정부의 공식 발표에 주목했다. SNS와 각종 유언비어들이 발생했지만 확산력은 매우 저조해 이내 사그러지는 상황이었다. FBI를 포함한 대테러 정보국이 현장을 조사해 갈 때에도 언론들은 정부의 공식 발표 이상을 넘으려 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발표 역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발표를 해 가면서도 부정확하거나 수사중인 부분은 양해를 구하면서 발표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다음날, 보스턴 레드삭스 운동장에 거대한 플래카드가 내 걸렸다.

Boston isn't a city, it's a family.

보스턴은 한 도시가 아니다. 가족이다.

이 현수막 하나가 모든 것을 웅변하고 있었다. 보스턴 시 당국과 주민들은 이후 곳곳에서 용기있게 재할하려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발굴해 확산시키고 모든 이벤트마다

비극과 슬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의 용기를 칭송했다.

보스턴 레드삭스 야구팀은 월드시리즈 만년 최하위팀이었는데, 2013년 리그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기적같은 우승을 거머쥔 선수들은 “엄청난 테러로 실의에 빠진 보스턴 주민들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기 위해, 다시 일어서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 마음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날 선수들은 우승컵을 들고 주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행진을 하다 마라톤 결승점에 다다랐다. 그들은 우승컵을 테러 현장에 내려 놓은 다음, 그들의 유니폼을 우승컵 위에 입혔다. 그 유니폼에는 두 줄로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다.

BOSTON 보스턴은
STRONG 강하다

현장에 있던 수천명의 시민들이 환호했다. 그리고 God Bless America 를 합창하며 하나가 됐다. 언론들은 ‘테러의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끔찍한 곳을 회복과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는 거룩한 의식이었다’고 썼다.

세월호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은 보스턴 폭탄테러 1주년이 되던 날이다. 4월15일 오후 2시49분(현지 시각), 백악관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끔찍한 테러 희생자를 기리며 30초 동안 묵념했다. 대통령과 함께 1년 전의 끔찍한 테러를 기억하는 수많은 보스턴 주민과 미국 국민들이 침묵속에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그리고 가는 빗줄기가 내리는 가운데 압력솥 폭탄이 터져 끔찍했던 현장에서는 짧은 기념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우산도 들지 않고 내리는 비를 맞으며 1년 전을 기억했다. 이날 조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는 대처했고, 견뎌냈고, 극복했다. 결승선은(테러범들 것이 아닌) 우리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드발 페트릭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테러는 엄청난 아픔이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 더욱 결속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선규 저 ‘미국 이후의 미국’에서 발췌.요약)

같은 행성의 반대편에서 재난을 극복하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두 나라의 공간적 거리만큼이나 상반된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주먹구구’는 진영논리로 패싸움하는 데 적용되는 인식론일 것이다. 근대화를 넘어 현대화를 구가해야 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인식수준은 과연 개량적이고 더 나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정보는 유언비어의

씨앗이다. 이들이 발아하면 비로소 균중은 거짓을 믿는 민주 시민이 되어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

인문학이 주구장창 강조되는 이 시대에 어째서 우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기록조차 갖지 못하는 것일까. 수백년 전 조상들의 왕조실록을 어째서 우리는 생경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일까.

2014년 5월17일 밤에도 필자는 이런 고민을 하며 한편의 칼럼을 기고했었다.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 글을 다시 전재하면서 마칠까 한다.

바다에 무식한 '산소통' 기자들의 오만

자신에겐 부정확성을 허용하고, 남에게만 정확성을 요구하는 한국 언론의 암담한 모습

1. '산소통' 메고 잠수하면 죽을 수도 있다

바다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연일 현장 보도가 신문과 방송을 압도하는 중이다.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검증없이 보도되고 이로 인한 질타도 뜨겁다. 현대, 유독 바다에 대해 우리는 무식하고 여전히 그 무식한 태도를 수정하지 않는 듯하다. 그 중 가장 거슬리는 표기가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잠수부'라는 표현이다. 1등 신문이라는 <조선일보>도 예외가 아니다.

'산소통'은 'Oxygen Tank'로 의료계나 산업현장에서 용접용으로 사용하는 실린더를 말한다. 다이버들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면 산소 중독으로 경련을 일으키다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다이버들은 '산소통'이 아니라 '공기통'을 메고 들어간다. '공기통'은 'Air Tank'로 압축된 공기를 담은 실린더를 의미한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78.5%의 질소와 20.95%의 산소 그리고 0.55%의 아르곤과 같은 활성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量으로 따져도 '질소통'에 가깝지 '산소통'은 아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아무도 수정하려 하지 않는다. 경제성장과 함께 레저 인구도 급성장해 우리나라의 스쿠버 다이빙 인구가 대략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2만 명이 넘는 기자들 가운데 스쿠버 다이빙을 해본 기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쯤 되면 스쿠버 다이빙과 관련한 지식 정보는 상식의 세계에 속할 것이다. 최소한 '산소통'과 '공기통'을 구별해 표기할 수 있을 텐데도 이런 誤記(오기)는 고쳐질 줄 모른다.

바다와 관련된 지식의 부족함은 서식지와 생김새가 다른 '송어'와 '송어'의 혼란에서도 드러난다. '슈베르트의 송어'를 지금도 버젓이 음악교과서에 싣고 있으며, 잘못 되었다는

지적이 여러 해 전에 있었음에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三面(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에서 살아온 우리의 不正確(부정확)한 不誠實(불성실)이 부끄럽다.

2010년 3월26일 천안함이 폭침되었을 때 우리 국민은 거센 조류 앞에서 시신과 함체의 인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학습할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 4년 뒤 우리가 겪는 이 불행에서 그때의 학습효과는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

필자도 다이빙을 즐긴다. 1979년에 첫 다이빙을 한 이후 지금까지 여유가 되면 다이빙을 즐기며 횡수로도 200회 이상이니 아마추어로서는 제법 괜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구조다이빙 자격증과 마스터 자격증도 갖고 있다. 深海(심해)잠수는 65m까지 기록했고 수중탐사로 수심 45m 아래의 북한이 판 땅굴로 의심되는 곳을 탐사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2노트 이상 되는 潮流(조류)는 마스터 할애비라도 불가항력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거슬러 갈 수 없다. 필자는 수심 30m 부근의 視界(시계)가 20cm도 안 나오는 빨탕 속에서 강한 下降(하강) 조류를 만나 표류하게 된 사고를 두 번이나 경험했다. 길게는 한 시간 반 이상 표류하다 지나가는 여객선에 의해 겨우 구조된 경험도 있다. 그때가 2노트였는데 하물며 6~8노트의 조류에서랴. 이 정도의 조류는 마치 대형 트레일러를 날려버리는 허리케인 앞에 내동댕이쳐진 인간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언론들은 빨리 구조하지 않는다고 성화다. 정작 현장에서 목숨을 내 놓고 구조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은 말이 없다. 그들을 대신해서 말해줄 사람들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이빙을 좀 안다는 필자는 작금의 언론행태가 밍다.

2. 말과 글이 땀과 기술을 압도하는 과정

급류에 발 한번 담귀보지 못한 자들이 정부를 탓하고 현장의 전문가를 비난하며 완벽하지 못한 제도와 절차를 헤집는다. 이 틈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가짜들이 설친다. 설치는 자들은 한결같이 ‘名分(명분)’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 ‘名分’은 陣營(진영) 논리를 낳는다. 名分이 같으면 언론도 엄격하게 검증하지 않는다.

홍XX라는 여성이 MBN에 등장해 ‘민간 잠수부’라며 떠벌릴 때 웬만한 다이버들은 한 눈에 ‘저건 가짜’라고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 체구로는 잠수장비를 제대로 운반도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민물이 아닌 바다에서라면 부력을 상쇄시킬 鈹(납) 벨트만도 8Kg 이상을 허리에 돌려야 한다. 특히 수온이 낮은 서해바다에서는 신체를 물과 완전 분리시키는 드라이 수트(Dry suit)를 착용해야 하니 벨트는 그보다 훨씬 무거워진다. 공기통까지 포함하면 40~50kg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저런 몸매로는 관광지에서 레저 다이빙이나 스노클링 몇 번 해 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 눈으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거센 조류에 맞서며 수중 30m 부근에서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르는 사람을 구하기엔 知力(지력)은 고사하고 體力(체력)으로도 역부족임을 누가 알 수 있는 일이다. 의심나면 다이빙 경력부터 물어보거나 확인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방송인들은 이 절차를 생략했다.

이XX라는 사람도 그날 오후 MBN에 등장해서 현장의 구조작업을 비판하며 ‘다이빙 벨’을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던 이 사람의 주장이 이미 황당한 내용이었음이 밝혀진 지도 4년이 다 돼 가는데, 방송과 언론들은 진영논리에 휩싸인 채李 씨의 낚시밥을 또다시 덩석 물고 말았다. 하지만 ‘다이빙 벨’은 급류에서 무용지물임이 서서히 밝혀졌다. 뒤늦게 방송과 언론들도 발을 빼는 중이다.

아마추어들이 전문가를 압도하는 세상으로 변했다. 말과 글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땀과 기술로 먹고사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세상이 됐다. 이들은 말과 글로 명분을 만들어 칼로 삼는다. 칼자루를 쥔 쪽은 死生결단하고 상대를 공격하면서 ‘완벽하지 못함’에 대해 단죄하려 든다. 거짓이 사실을 압도한다. 명분으로 무장한 진영논리가 거짓세력을 권력화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士林 당파가 무색하다.

3. 거짓과 無知의 암흑속으로 침몰시키려는 세력들

왜 우리는 정확성에 대해 둔감한 국민이 되었을까? 왜 우리는 정확성을 거부하면서도 상대에게는 완벽성을 요구하는 것일까?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앓기 시작한 것일까? 수 천년 이어져 온 ‘주먹구구의 문화’를 타파한 것이 5·16 군사혁명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는 급속히 ‘명분’과 ‘체면’을 앞세우는 조선조 유교사회로 침몰하고 있다는 느낌이 다.

사리분별을 따지면 ‘과격하다’, ‘싸움꾼 같다’란 손가락질이 드세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진영논리가 판을 친다.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변론을 이어가면 어느새 ‘일리 있다’며 편드는 패거리가 등장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패싸움으로 변모한다. 패싸움은 항상 이 나라의 정치권 어느 언저리와 맞 닿아있고, 그 양태는 조선조 黨派(당파)싸움의 모양새를 띤다.

절대로 사실이 거짓을 이기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 명분만 있으면 그 어떤 거짓말도 세력을 형성해서 살아남는다. ‘명분’은 선비가 重視(중시)여기는 ‘예의’와 ‘체면’의 방패가 된다. ‘명분’을 보호막으로 삼는 ‘예의’와 ‘체면’만 갖춰지면 ‘인맥’과 ‘신분’도 유지된다. 선비가 중시여기는 ‘예의’와 ‘체면’이 전문가들이 중시 여기는 ‘사실’과 ‘정직’을 압살한다.

사실을 기록한 역사를 뒤틀고도 여전히 學界(학계)에서 군림하는 학자들이 이를 증명한

다. 誤報를 밥 먹듯 하고도 살아남는 언론, 헌법의 해석을 제멋대로 해도 身分戰線(신분전선)에 이상 없는 검찰과 사법부도 한 통속이다. 민생법안을 장식품 정도로 치부한 채 궤변으로 날을 지새우는 정치권이 그들의 대표주자이다. 이들 모두는 말과 글로 밥벌이를 하는 지식층으로서 조선조 선비들의 DNA를 불러 받았다. 그들이 우리 사회를 거짓과 無知(무지)의 암흑속으로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

4. 거짓과 無知의 암흑을 깨부셔야 한다

다시 세월호 참사로 눈을 돌려 보자. 정작 세상이 무너질 듯한 절망속의 유족들에게 빛이 되어줄 救援(구원)의 말과 글은 거짓 선동이 아니라 올곧은 정직함에서 비롯된다. 정직한 말과 글만이 그들에게 오늘의 悲劇(비극)을 딛고 일어설 힘이 된다.

며칠 전 기고된 金東吉 선생의 'Life must go on though good men die (선한 자가 죽더라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글처럼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정직해야만 진정한 용기가 생겨난다. 비극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직함으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불확실성의 바다를 향해하는 것과 같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 살든 프랑스에 살든 아프리카 밀림이나 남태평양의 피지 섬에 살든 이런 비극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사고에서는 神을 믿든 안 믿든 무관하고,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상관없으며, 부자이든 가난뱅이든 무차별적으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을 수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진정한 敵은 지금도 불확실성의 커튼 뒤에서 우리의 삶을 노리고 있으며,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불확실성의 그늘을 조금이라도 줄여가도록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노력하자는 다짐이어야 한다. 그것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救援(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체면이나 허풍같은 허위의식은 벗어던지고 냉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과 無知의 암흑을 깨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이 처음 이 세상에 나오면서 시작된 '啓蒙主義(계몽주의)'는 아직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언론 스스로가 가장 먼저 계몽되어야 할 것 같다.

유언비어 저널리즘(?)의 원인과 개선

황 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 인터넷 저널리즘 전성시대

대한민국은 ‘미디어 저널리즘 시대’에서 ‘인터넷 저널리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 인터넷 포털은 주류 언론들을 위협하면서 여론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각종 언론 관련 조사에서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지 오래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 우리나라 사람의 67.1%가 뉴스 접촉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영향력도 TV 다음으로 높은 것을 나타낸다. 또한 신뢰도도 신문이나 통신사들보다 높고, 지상파방송·종편·보도채널들과 거의 비슷하다. 실제 1인 미디어로 시작한 미국의 BuzzFeed는 기성 언론사들을 압도하면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의 인터넷 언론은 아직도 기존 매체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100만의 넘는 광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1인미디어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향후 1인 인터넷 언론사들도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 다분히 정치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SNS를 중심으로 ‘개미떼 언론사’들의 영향도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처럼 인터넷과 SNS가 주도하는 언론 실상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근거가 불투명한 허구성 기사, 정제되지 않은 표현, 편파성을 넘어 아예 정파성을 표방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인터넷 언론들이 창궐하고 있다. 물론 인터넷은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적 통신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전달내용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언론사들보다 자유롭게 도리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더구나 진입장벽이 거의 없어 진·출입이 매우 용이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언론사간판을 걸고 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언론의 오래된 병폐인 ‘소방수 혹은 떼거지 저널리즘’을 넘어 무슨 ‘홍반장 저널리즘’ 혹은 ‘뺨다 방 저널리즘’처럼 되어 버렸다.

이처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언론들이 경쟁하면서 많은 병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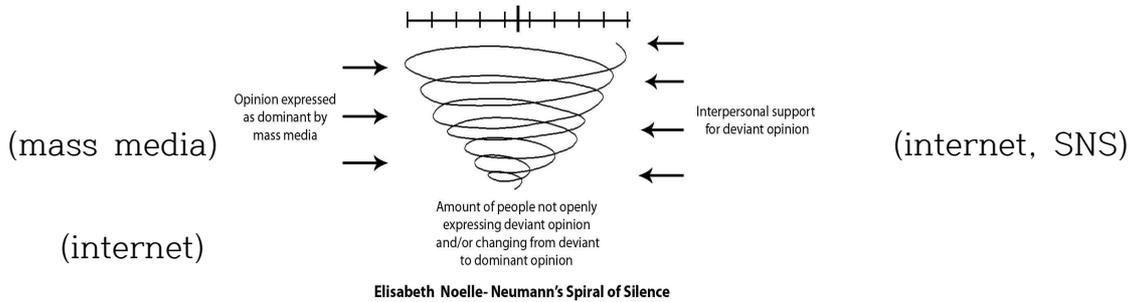
이 발생하고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수많은 인터넷 언론매체들이 경쟁하면서 좀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주목받기 위한 ‘선정성’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이른바 ‘낚시성 제목’은 이미 일반적 현상이고, 뉴스 가치(news value)도 없는 가십성 연예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정치·사회 같은 뉴스까지도 급격히 선정적으로 변화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선정적인 인터넷 언론들의 위력이 커지면서, 기존 언론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정성 경쟁을 벌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인터넷에서 뉴스 소재를 찾고 인터넷에 떠다니는 것들을 뉴스화하는 ‘짜라시 언론’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TV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세상을 알려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이제는 ‘기사작성하려면 현장에 가지 말고 책상에서 인터넷을 뒤져라’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셋째,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인터넷 뉴스들 상당수가 정파성을 상업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치 상업주의’에 매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 다수의 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극세분화된 인터넷 언론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정파적 충성심이 강한 소수의 독자’를 포획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지금 인터넷 언론의 상당수는 강한 정치적 동질감으로 뭉쳐진 구성원들끼리의 ‘자기 확신(self-confidence)의 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의 구조적 문제점

이처럼 인터넷에서 무절제한 언론유사행위들이 지배하면서 한국 언론은 급속히 황폐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기존 언론이 상호 공생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70년대 초 Noelle Neumann이 제기했던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다수의 여론몰이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이 합해져서 발생하는 ‘침묵의 나선(Spiral of Silence)’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공명성(consonance)’ ‘누적성(cumulation)’ ‘편재성(ubiquity)’을 가진 언론사들이 지배적 여론을 비추어주면, 사람들은 ‘고립의 공포(fear of isolation)’ 때문에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지배적 여론은 더욱 공고해지는 전체주의적 사회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이나 SNS가 고립의 공포를 대신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매스 미디어들에 의해 생산된 뉴스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더욱 지배적 여론으로 공고해지고 기존 언론들은 이를 다시 받는 식이 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뉴스 생산 조차도 인터넷 매체나 SNS들이 장악해나가고 기존 언론들이 받아 보도하는 경우도 늘어나 양자간 역할 교환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존 록크나 토마스 제퍼슨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주창했던 ‘자유주의 언론관’은 설 자리가 없다. 즉, 토론과 숙의라는 ‘이상적 발화 상황 (idealistic speech situation)’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신 ‘집단적 여론’의 힘으로 합리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비판’과 ‘근거의 수용가능성’이라는 의사소통의 합리성도 소멸시키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 언론은 Meyerson의 주장처럼 동질 집단구성원들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는 ‘자료 밀어 넣기(data pushing)’와 ‘접근 신속성’ 원칙만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 인터넷 언론은 다양성보다 획일적 집단행동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 간의 ‘자기 확신 공간’ 즉, ‘개방형 폐쇄집단’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여론은 ‘다수에 의한 획일화’ ‘침묵의 나선(spiral of silence)’현상이 구조화되어 버렸다. 때문에 이제 시민들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들이 상상하는 ‘사려 깊은 시민 (informed citizen)’이 아니라 ‘분위기에 취약한 유권자’이 될 수밖에 없다. Rheingold가 말했던 ‘영리한 군중(smart mob)’이 아니라 ‘그냥 우중(mob)’만 있을 뿐이다.

3. 유언비어 저널리즘과 공적 질서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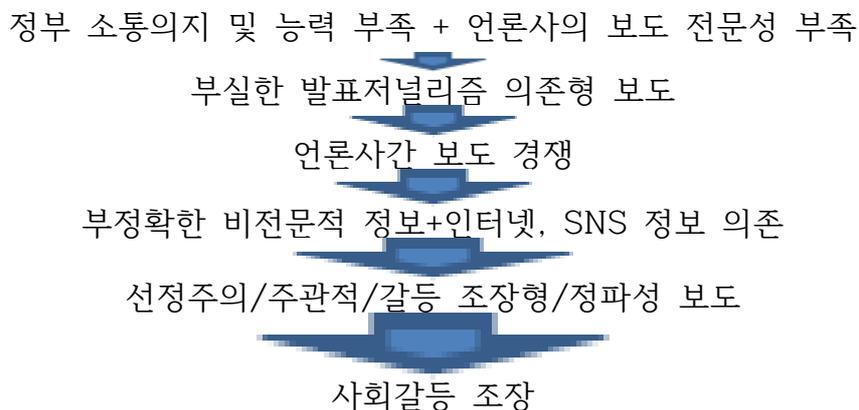
이처럼 왜곡된 언론지형이 지금처럼 유언비어가 지배하는 한국사회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 ‘세월호 침몰’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사회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또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언론과 정치집단들에 의해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국정마비 현상을 반복해오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들의 선정적 폭로성 기사들과 이를 받아쓰는 기존 언론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한국사회를 위험사회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유언비어란 말 그대로 ‘근거 없이 떠다니는 말’들을 말한다. 때문에 유언비어

는 사실과 거짓의 중간 썸 되어야 하고, 매스미디어가 아닌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루트에 의해서 전파되면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소통기구나 매스미디어 같은 ‘공적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할 경우에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지금처럼 정부의 소통의지나 능력이 취약하고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경우에 창궐하게 된다. 실제 천안함 폭침이나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언비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돌아다니면서 더욱 단순해지고 짧아지고 간단해진다(leveling). 보다 적은 단어, 적은 사실로 단순화되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 거리로 진화하게 된다. 실증 연구에 의하면 70%의 내용이 5-6번 전달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세월호 인명구조에 대해 구조작업의 어려움 같은 문제는 없어지고 ‘정부가 구조작업을 안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만 남는 것과 같다. 둘째, 큰 문맥에서 몇 개의 기이하고 주의를 끄는 단절적 용어들만 선택적으로 지각하게 하여 첨예화(sharpening)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숫자/시간/동작/크기/상징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세월호 관련 많은 내용들이 소멸되고 ‘다이빙 벨’과 ‘류병언 엽기 행각’만 기억되는 것과 같다. 셋째,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습관, 관심, 감정과 특정 사건들을 연계시키는 동화(assimilation) 현상이 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기대/동기부여/편견/관심 등과의 연계가 있다. 모든 국가 행위들을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보상이라는 데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어찌되었든 지금처럼 무책임한 유언비어 저널리즘이 활개 치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언비어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소통의지와 능력부족 그리고 잘못된 저널리즘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 실제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아래처럼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왜곡된 여론에 공적 기구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들도 그렇고 외부 어떤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있어야 할 법원 까지도 그런 현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수의 의사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여론이 정파성과 상업성에 의해 왜곡된 유연비어라면 그것은 올바른 민주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2000년대 들어 한국사회가 극단적으로 ‘이념 지형화’ 되어 버렸고, 인터넷과 SNS공간을 정파성을 가진 집단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정부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유연비어를 마구잡이로 양산해내는 인터넷 공간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과 유연비어를 생산 분배하는 것을 위한 기존 언론사들의 책임윤리 의식 제고와 전문성 제고를 통한 뉴스 품질향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정부의 소통의지와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만이 유연비어의 창궐을 예방하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유언비어를 선동하는 문화계

남 정 옥

송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토론문 제목으로 ‘유언비어를 선동하는 문화계’를 제시 받았으나 이 제목은 그다지 명료한 제목이 아니다. 일단 문화계 전체가 유언비어를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의 반대한민국 신념을 가진 인간들이 문화에 유언비어를 실어 나르기 때문이다. 냉전의 핵심은 이념전쟁이다. 이념 전쟁이라고 하니까 마치 토론회에 마주보고 앉아 자신이 가진 이념의 우월을 주장하면서 상대의 논리를 격파하고 방어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 이념 전쟁은 그런 식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념 전쟁은 역사와 문화 영역에서 벌어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 전쟁, 문화 전쟁이 바로 이념 전쟁인 것이다. 정치이론으로 풀어가는 선동은 외면당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역사와 문화에서의 선전과 선동은 이론이 아니라 대중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스토리를 통하여 표출되고 전달된다. 대중들은 특정 사안에 대한 1,0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읽고 싶어 하지 않는다. 대중들은 그 내용의 고갱이가 들어있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원한다.

유언비어는 그저 부유하는 언어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문화 예술의 꼴을 덧쓰면 사실이 되고 역사가 된다. 세월호는 시간이 흐르면 가물가물해진다. 기억은 불명료하고 부정확하다. 그러나 문화 예술로 만들어진 기억은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오래도록 살아남는다. 세월호는 영화 ‘다이빙벨’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된다. 다이빙벨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세월호는 ‘사고’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책임을 팽겨 친 ‘사건’이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면 이것은 세월호를 설명하는 유일한 단서가 된다.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고 수궁해야 하는 사실이 된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오래 전에 보았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이다. 태백산맥은 지리산 빨치산의 기억으로 역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빨치산은 민간인을 학살한 잔혹한 악당이 아니라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희생자들이 된다. 작가가 현지에서 취재한 내용을 완전히 바꿔서 썼다는

반론은 묻히고 무시된다. 소설 태백산맥은 대체 역사가 되고 후손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그 시대를 정리한다.

이러한 문화의 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계다. 유언비어에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면 그것이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창이 되고 칼이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유언비어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촘촘하게 그물로 엮는다. 견고해진 유언비어는 더 이상 말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어떤 사안에 대한 ‘포지셔닝’이다. 반박과 폭로만으로는 그것을 막아낼 수 없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이념 전쟁에서 연전연패중인 대한민국 세력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거짓유포에 관대한 사법부

황 성 옥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변호사

1. 들어가며,

우리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보면서, 한국사회의 여론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울어진 여론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토록 우려하던 광우병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지금 우리 국민은 미국소고기를 먹는 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는다. 당시에 지각 있는 일부 지식인들이 광우병 사태를 일으킨 세력의 주장이 허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치르고 결국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광우병 사태를 촉발시킨 MBC PD수첩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법리에 따라 무죄판결이 나왔을 뿐이다.

공중을 상대로 허위사실 혹은 유언비어를 배포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인가? 나아가 그것이 의도화 되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음에도 형사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인가?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현행 법률대로 얘기하자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도 결국 괜찮다는 것인가?’ 라는 상식적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2.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사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법이 있었다.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그것이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7조(벌칙)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그러나 이 법조문에 대하여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¹⁾으로도 알려진 재판에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²⁾을 내림으로 인해 위 법조문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반대의견(합헌)을 보면, “허위의 통신”에 관해서 일반적인 ‘허위’의 관념은 내용의 거짓과 명의를 거짓을 모두 포괄하는 점과 ‘내용의 허위’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이나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점, 법률상 ‘공익’ 개념은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구성체인 국가사회의 이익’을 의미하고, 공익을 ‘해할 목적’은 행위의 주요 목적이 공익을 해하는 것인 때를 의미하는바,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점, 더구나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허위의 통신’ 가운데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고 있어서 처벌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³⁾ 부

1) 검찰은 미네르바(박XX씨)가 정부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려 매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8년 12월 29일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기소하였고,

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설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지 않고, 글 게시 직후의 달려 매수량 증가가 글 게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2)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 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현재의 다원적이고 가치상대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상황이 문제되었을 때에 문제되는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익간 형량의 결과가 언제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분에 대하여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와 같은 정도의 명확성을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유언비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낭비를 초래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일률적으로 이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조문이 문제된 이른 바 ‘미네르바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⁴⁾을 기각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선언했기에 법원이 그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고 기존 판례의 해석에 근거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이미 우리 대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한 것은, 명백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헌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오히려 일률적으로 모든 허위사실 유포를 표현의 자유로 허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법원의 판단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라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3. 현재의 상황

가. 법률규정의 부재

위에서 보았듯이, 이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사회나 여론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에 대해 아무리 국가적 비용이 소모가 되어도 그 자체로는 처벌조항이 없다. 처벌의 만능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어 항상 위헌시비를 안고 있는 경범죄처벌법에도 처벌 조항은 없다.

나. 결국은 명예훼손

- 3) 보통 형사범을 처벌할 경우는 의도와 인식을 요구하는 고의범의 경우와 주의의무위반을 한 과실범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일부 고의범 중에서 고의 이외에 더 명확한 목적까지 있어야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목적을 고의를 넘는 주관적의도가 있어야한다는 의미에서 초과주관적 구성요소라고 칭한다.
- 4)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해달라고 하는 제도. 만일 법원이 기각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헌법소원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현재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퍼뜨렸을 경우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결국 그로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 한한다. 아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⁵⁾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어서 법적으로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즉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판례 및 사건의 분석

(1) 광우병 관련 PD수첩 사건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국가기관의 일을 수행하거나 공무원 개인 그 자체가 국가기관인 경우, 개인에 대해 명백히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려고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2) 천안함 관련 신상철 대표 1심 판결

이 사건은 무려 재판을 5년이나 끌다가, 기소된 범죄사실 34건 중에서 32건이 무죄가

5) 물론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도 존재하지만 여론과 관련되는 조항은 인터넷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이 더 직접적이라 논의를 생략한다.

났고 단 2건만 유죄 판결이 났다. 2건이 무죄가 난 이유는 군당국이 천안함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위해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였고 아무 근거 없이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고발장 형식으로 작성한 내용이어서 당사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세월호 관련 홍가혜 1심 판결

피고인은 세월호 관련하여 잠수부 자격증도 없으면서 구조를 하리간다고 하면서, 해경이 고의로 민간잠수부의 구조를 막는다고 SNS에 글을 올리고 채널 MBN TV인터뷰를 하면서 역시 해경과 정부가 민간구조작업을 막는다고 하여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민간잠수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어서 다소 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방의 의도가 없고 국가나 정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하였다.

(4) JTBC 다이빙벨 보도 사건

JT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⁶⁾으로, 1심에서 JTBC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한 사건으로 2심 법원은 방송은 음성과 영상을 동시 사용하고 강한 전파력을 가져 대중조작이 가능하므로 보다 높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요구받으며 더구나 뉴스 프로그램은 더욱 더 정확한 사실을 방영해야 한다면서 불명확한 사실을 전달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정당하다고 하였다.

라. 소결

결국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귀착되지 않거나, 귀착되더라도 우리 판례의 해석론상

6) JTBC NEWS 9(손석희 진행)에서 자칭 해난구조전문가 이종인을 스튜디오로 초청해 인터뷰하는 방송을 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이종인이 만든 다이빙벨이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작업이 가능하고 수심 70m, 100m까지 작업이 가능하며, 20시간씩 작업하면 2,3일 내에 세월호 화물칸 3,4층 수색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현재 해경이 주도하고 있는 구조체계에서는 이렇게 유용한 다이빙벨을 투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는 이유로 ① 관계자 징계명령 ② 고지방송명령을 발하였고, JTBC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제기.

진실성에 대한 당사자의 믿음에 근거가 있으면 유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처벌의 공백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나마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위의 JTBC사건의 경우처럼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을 통해 행정제재가 가능할 뿐이다.

4. 나오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것을 폭넓게 보장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허위사실로 인해 사회가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오히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진영논리에 의해 공격받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것은 우리 헌법이 가치상대주의에 입각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고 명백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가치절대주의에 기반해서 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를 넘는 자유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판례가 굳어진 해석론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마당에 유언비어나 허위사실 유포 그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법을 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도 처벌을 확대하라고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남은 것은 위의 JTBC사건처럼 재량적 판단이 가능한 행정청의 행정제재를 통하거나 민사책임을 묻는 방법인데, 후자가 활성화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현재 판례의 경향상 민사책임을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를 통한 여론의 환기에만 기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의 한계상황이다. 끝.

유언비어-선동에 휘둘리는 시민의식의 현주소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유언비어, 데마고기(Demagogy)의 위험성(파급력)

-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문에 의하여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연쇄반응적으로 퍼지는 정치적 루머의 파급력과 위험성(불안정한 사회심리와 미성숙한 시민의식의 반영)

특히 칼 포퍼(Karl Popper)가 말하는 ‘열린 사회’, 즉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 체제에서 언론의 자유를 금과옥조로 내세우면서 유언비에 의한 선전과 선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반대하는 급진세력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음.(민주주의와 관용)

* 요세프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 : 나찌의 선전장관

“민주주의가 불구대천의 원수에게 자신을 섬멸할 무기를 스스로 쥐어준다는 사실은 언제나 민주주의 자체가 가진 최고의 난센스다.”

- 유언비어의 생산과 전파 체계

과거 광우병 사태나 천안함 폭침 사건,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이나 급진좌파 단체 중심의 유언비어 생산(특히 SNS) -- 좌파 언론의 지속적 확대 재생산(특히 사이버 언론) -- 야당의 정치 쟁점화 -- 일부 주류 언론이나 여론 정치인의 부화뇌동 -- 건전한 시민의식의 마비 -- 궁극적으로는 여론에 영향(이로 인하여 엄청난 사회혼란의 야기와 국론분열, 갈등해소를 위한 막대한 비용의 지출)

- 유언비어를 활용한 선동과 선전은, 음모론과 언어의 혼란 전술이 기초(좌파 이

론)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사드 괴담)

: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한국군의 '사드도입' 내지 '사드구매' 문제로 비난

사드의 중국 목표설, 이에 따른 중국의 한반도 공격가능성설, 비용 대비 성능 의문설, * 건강과 환경 위험설을 앞세우고 님비(nimby) 현상을 부추김
전자파로 인한 '뇌종양과 백혈병' '내장이 파열되고 몸이 녹는다'는 괴담의 유포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지속적 반정부 투쟁의 중심세력인 좌파 진영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언론 특히 사이버 언론과 SNS의 적극적 활용으로 유언비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음.(언론의 자유와 인터넷의 익명성 보장) : 일부 정치인들도 부화뇌동

더구나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SNS의 사회적 파급 효과가 증대됨에 따라 유언비어의 위험성 또한 심각한 상태임.

-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고유한 신념이나 가치체계가 해체되고 불안정하여 자극적인 정보에 의한 피암시성이 높아질 경향이 있으므로 반정부, 탈권위를 내세우는 정치적 목적의 유언비어의 위력과 위험성은 더욱 가중됨.

또한 경제적 불안정, 건전한 시민의식의 약화 등 사회적인 기초가 동요되는 곳일수록 단순한 루머나 가십 수준을 벗어나 악성 유언비어가 발생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높음.

- * 마타도어(matador) 즉 근거 없는 이야기로 상대편을 중상모략(中傷謀略)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한 흑색선전의 난무 :

북한의 휴전선 목함지뢰 폭발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자작극설, 미군함에 의한 천안함 폭침설, 세월호의 국정원 개입설과 유병언 생존설

- 극히 짧은 문장으로 작성된 유언비어의 위력과 파급력에 비하여, 이에 대한 교정과 반박은 장문의 보고서 수준이어야 한다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문제, 더구나 이미 마비된 대중은 그 보고서를 쳐다보지도 않으며 쳐다보더라도 이미 때가 늦었음.

2. 미성숙한 시민의식과 유언비어 - 대중 선동의 심리학(Ralf G. Reuth)

요세프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

○ 이성이 마비된 군중심리의 활용 : 선전과 선동

“거리를 정복하면 대중을 정복할 수 있다. 대중을 정복하는 자는 국가를 정복한다”

괴벨스는 당시 무능한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탁월한 달변과 선전, 선동으로 끊임없이 비방하며 깎아내렸고, 민족주의와 이상주의를 동원하여 나찌당과 히틀러를 우상화한 이미지화 정책은 당대 사회적 문제와 불만들과 함께 대중들에게 기가 막히게 먹혀들어갔으며 괴벨스는 이를 두고 ‘정치적 예술’이라고 표현함. (이성이 마비된 대중의 집단광기를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대중은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취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다음은 의심하나 계속하면 나중에는 믿게 된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이왕 거짓말을 하려면 크게 하라.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을 잘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진실이 된다.’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피에 굶주리고 복수에 목마른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한다.’

‘이성을 제압하여 승리를 거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포와 힘이다.’

○ 유언비어가 발생할 수 있는 배경과 특징 : 사태의 중요성과 모호성(불확실성)

유언비어의 발생 조건으로는 그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큰 흥미와 관심을 가져다줄 것과,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따라

서 사람들이 다소라도 불확실한 심리상황에 있을 것 등을 들 수 있음.

G. W. 알포트와 L. 포스트만에 의하면, 유언비어 전달의 강도는 그 내용의 중요성과 모호한 상황(정보의 부족)의 곱에 비례함.

대규모 재해나 정치적, 경제적 혼란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때때로 강한 불만이나 불안을 느끼기 쉽고, 급변하는 사태에 대비할 확실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유언비어에 영향을 받게 됨.

1. 유언비어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집단세력 또는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에 관하여 대중 사이에 유포시키는 왜곡과 중상(中傷)을 포함하는 선동적인 경우가 많다.
2. 내용이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을 유발하는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3. 확정적인 판단을 내릴 충분한 정보를 얻을 길이 없고, 그런 의미에서 사태가 애매한 것일 때에 힘을 얻게 된다.
4. 일반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한편, 가공적인 인과관계의 상정(想定)이나 사실의 왜곡을 교묘한 언어로써 보충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의도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사태에 관한 대중의 인지구조(認知構造)를 형성한다.
5.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대중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어 대중 사이에 공통적 잠재적 불만이 내재해 있는 경우 더욱 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6. 불만을 투사할 대상이 지시되고 불확정한 상황을 설명할 일단의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유언비어는 논리적 비약이나 반증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귀결을 받아 들여서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
7. 유언비어는 추종자 또한 동조자 사이에서 쉽게 널리 퍼져간다. 유언비어는 대체로 정치적 배경을 가지지만, 그 유포자가 항상 냉철한 정치적 의도에서 그러한 의식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만은 아니다.
8.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편집병적인 데가 있다.
9. 욕구불만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외적대상은 바로 강력한 증오심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
10. 가장 위험한 것은 지배계층이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유언비어의 신뢰성을 획득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대중조작을 꾀하는 일이다.

3. 미성숙한 시민의식 : 믿고 싶은 것과 유언비어의 결합

-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세력의 목적(미성숙한 시민의식의 활용)
 -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국가와 사회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은 달성함.

- 건전한 시민의식의 혼란 속에서 특정한 정치이념에 따른 진영논리를 강요함.
- ‘올바른 교과서’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유언비어를 통하여 대중의식을 마비시키고, 대중으로 하여금 ‘의견진술 공포증’을 느끼게 함.(이청준의 소설 ‘소문의 벽’ 주인공의 사례)

‘대중은 유언비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소문에 벽’에 둘러싸이게 된다.’

○ 유언비어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유언비어로 의식이 혼란한 대중에게 전파된 내용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지속되는 것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라는 효과임.

확증편향은 한번 듣거나 믿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으로서, 처음 들은 내용에 일치하거나 이전에 믿는 바와 모순되지 않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고, 부지불식 간에 기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차리기 어렵고, 따라서 그만큼 더욱 위험함.

확증편향이 생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가 진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임. 인간은 진위와 상관없이 어떤 가설을 빈번하게 들으면 신념화하게 되고, 어떤 가설을 일단 수용해버린 상태에서는 아주 설득력 있는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그것을 진실로 보려하며, 가설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가설에 대한 신뢰가 더욱 강해지고,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음.

4. 유언비어에 대한 사법적 대처의 한계

- 최근 청와대는 박대통령의 국회연설 후속조치로 안보위기 상황과 관련한 유언비어와 북한의 선전선동 등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키로 하고, 특히 북한의 선전 선동이 사회에 파고들어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SNS 등에서 유언비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음)

* 2010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외환보유고 바닥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선고한 이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예비군 소집령을 허위로 유포한 사건, 광

우병 사태 당시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여성 성추행 사실을 허위로 유포한 사건도 모두 무죄가 선고됨.(그 후 법률개정으로 처벌조항 폐지)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재의 위헌 판단 이유 : ‘공익을 해할 목적’의 ‘공익’은 불명확, 추상적 개념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헌법재판관들의 편협한 인권의식)

○ 사법부의 안이한 판단과 양형

2016. 1. 25.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이흥권)에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서프라이즈’ 등 인터넷 매체에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임에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34차례 올렸다가 기소된 신상철(야당 추천의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의 일원)에 대하여, 5년 6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은, 신상철이 허위의 사실로 군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 것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극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고,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었던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당시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당시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항간에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나친 과욕과 반대 정파 및 군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부른 경솔한 행동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그런 의혹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국민이 여기 현혹되는 사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이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민주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진통으로 이해하고 품고 가야할 부분도 없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이하의 법정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사안의 엄중함에 비하여 지나치게 안이하고 관대

한 선고를 하였다는 비판이 있음.

5. 악성 유언비어에 대한 대응 방안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근거에 대한 애매성, 모호성의 극복)
 - * 괴벨스 ‘국민들에게 무조건 불쾌한 뉴스를 숨기는 것은 심각한 실수다.’
‘우리는 적당한 낙관주의를 기본태도로 삼아야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변해야 한다.’
- 건전한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불신사회에서 신뢰사회’로 이행(임시방편의 능력이 아니라 정직함의 가치, 품성)
- 유언비어는 ‘열린 사회’의 적들임 :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토론에 의한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고, 전체주의와 급진주의, 이상주의적 광신도를 배격함.

- 시민사회와 공공성의 강화(신뢰할 수 있는 정부)
- 사법부와 입법부의 반성(자유민주주의의 자기방어권)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 공공복리 :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통의 이익(공공의 이익, 즉 공익의 강화)

- 정부 관련부처의 수장 및 홍보담당관 또는 대변인의 자질 향상과 언론의 협조



서울시 중구 정동길 12-11, 2층 (정동, 카리스타워)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